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 8 ~ 9 면

아랍 혁명
카다피 몰락과 서방의 개입
▶ 10 ~11 면

무상급식 투표 이후
이명박의 위기와 야비한 반격
▶ 3, 16 면

진보대통합
제대로 된 통합을 향한 전진
▶ 4 ~ 5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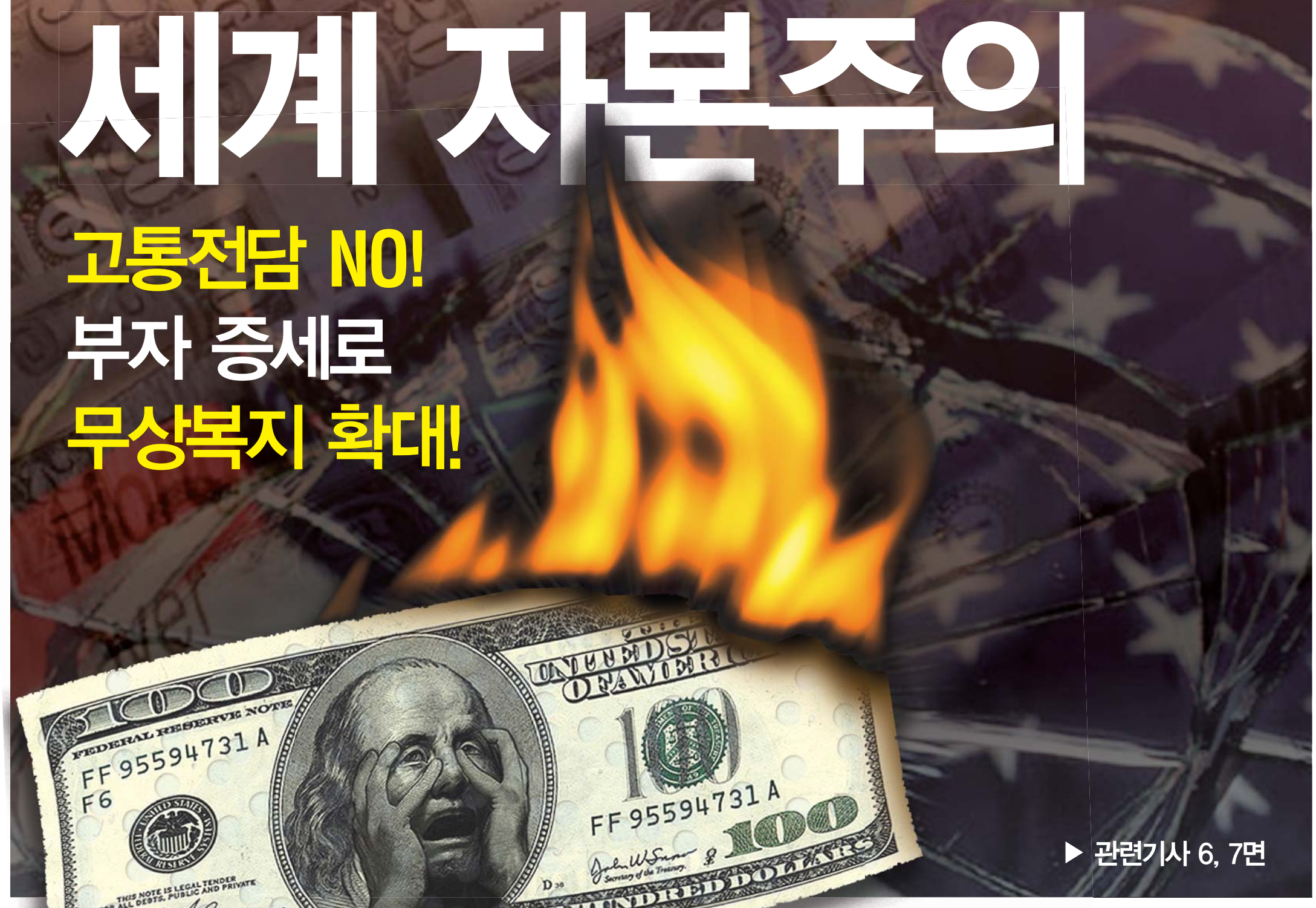
9·11 10주년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쇠퇴
▶ 11 면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레프트21
제64호 | 2011년 9월 3일 ~ 9월 23일 | 값 1,800원
다음호는 추석연휴 때문에 3주 뒤에 발행됩니다.

또 고장난 세계 자본주의

고통전담 NO!
부자 증세로 무상복지 확대!



▶ 관련기사 6, 7면

"보수의 패배". 이것은 무상급식 투표 바로 다음날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이었다. 실제로 이번에 보수 우파는 보기 좋게 참패했다. 홍준표의 "사실상 승리" 발언은 수많은 조롱과 패러디만 낳았다.

이번 투표에서 우파의 승산은 처음부터 높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세훈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우파의 위기감이 존재했다.

2007년 이명박이 당선할 때만해도 '성장'이 주된 화두였고, 우파들은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2008년 1백만 명이 참가한 촛불운동과 이어서 세계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급진화했다. 더구나 이명박 4년이 '성장' 논리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주된 화두는 '복지와 분배'로 바뀌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좌클릭' 했다. 심지어 우파인 박근혜도 박정희의 꿈이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다. 이명박도 "친서민"을 내걸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자들의 부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조중동은 '한나라당이 좌클릭하며 진보의 의제를 따라가 봤자 어차피 지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또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우파들은 이런 분위기를 뒤집고 싶어 했다. 오세훈이 총대를 매고 나섰다. 무상급식부터 막아서 복지와 분배에 대한 대중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오세훈은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전사'로서 우파들에게 각인되며 박근혜의 경쟁자로 떠오르길 바랐을 것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이 투표는 단지 무상급식 찬반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한판 대결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승산이 높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한나라당은 주저했고 내부에서 분열도 생겼다. 하지만 오세훈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까지 걸면서 한나라당은 이 싸움에 끌려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오세훈 편으로 결집한 우파들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복지 확대를 바라는 것은 "거지 근성"이고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빨갱이"라며 공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파들의 이런 역겨운 주장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진보적 시민 · 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이 전개한 투표 거부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성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우파가 얻은 표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이 얻었던 표보다 더 줄었다.

▶ 3면으로 이어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누구의 말일까요?

"만약에 진짜 공생 발전이 실천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토대가 허물어진다."

〈조선일보〉의 정확한 지적

"북한의 지령에 따라, 왕재산은 6 · 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 중 일부를 시의원, 구의원으로 당선시킨 사실이 교신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한나라당 논평, 투표한 주민도 간첩?

"그 정도 일로 [강용석을]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나라당 김형오의 자폭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똑똑하고 날카로운 인상 지양"

조남호의 청문회 컨닝페이퍼

"여보, 아버님 방에 보일러 놔 드려야겠어요."
"안 돼. 그럼 아버님 '거지 근성'만 키워 드려."

무상급식을 반대한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을 야유하는 패러디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오세훈 시장의 사퇴도 물리고 … 교육감 재선거만 하는 방법이 최선"

곽노현 사건에 신난 조갑제

"지나간 얘기니까 사실을 공개하겠다 … 희망버스 수백 대가 내려가서 부산 조선소를 점거하니까 우리가 종묘공원에 있는 우파 어르신한테 돈 1천만 원 줘서 … 가서 막았다."

우파 기독 정당을 만들려는 목사 전광훈

"[진보 양당 통합은] 정치 야합과 명분 없는 통합"

진보 잘되는 꼴 못 보는 한나라당

"이 정부 들어서만 등록금이 올랐나. 제가 국무위원하던 때도 … 많이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욕하지 마라. … 이명박 대통령 나쁜 점만 있는 대통령은 절대 아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유시민의 커밍아웃?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9월 23일)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피아노거리 입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 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 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희망 버스'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자

서울로 진출한 '희망의 버스'가 이번에도 성공을 거뒀다. 8월 27~28일 4차 '희망의 버스'에 참가한 7천여 명은 물대포까지 대동한 경찰의 철통 수비를 뚫고 도심 한복판을 누볐다.

이명박 정부는 2년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행동 엄정 대처"를 선언했지만, 통쾌하게도 바로 다음 날 "'희망버스' 시위대에 또다시 밀리고 말았다."(〈조선일보〉)

물론, 3차 대회에 견줘 대열이 다소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바로 한 주 전에 5천여 명 규모인 '희망 시국대회'를 열었고, 경찰의 방해로 참가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동의 열기가 식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조중동도 "3주째 서울 도심이 시위대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구나 2주 넘게 농성과 시위를 이어온 한진중공업 · 쌍용차 · 재능교육 노동자들을 비롯해 대학 청소 · 조선소 사내하청 · 전북 고속 등 투쟁 작업장 노동자들은 희망의 버스로 더 크게 결집했다. 노동조합운동의 부문주의적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호소가 이들의 가슴을 울렸을 것이다.

여기에 문정현 신부와 강정마을 주민들, 부산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일본에서 온 원정 투쟁단 등도 가세했다. 희망의 버스는 명실상부한 이 시대 연대 투쟁의 아이콘이 됐다.

이 때문에 보수 언론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서울까지 무법천지를 만든 '절망 버스'"를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자존심을 구긴 이명박 정부와 경찰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보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제 아무리 협박과 호통을 퍼부어도, 레임덕 위기를 가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겐 투쟁을 더 발전시킬 기회다.

그런데 노동조합 · 진보정당 상층 지도자들은 여전히 투쟁 건설보다는 민주당 · 참여당 등과 야권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 희망 시국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야권연대'의 들러리 같은 느낌을 받았다.

희망 시국대회와 4차 희망의 버스는 별개로 조직됐고, 민주노총 · 금속노조의 집회 동원력은 커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청문회가 보여 준 것처럼 국회에만 기대서는 조남호를 꺾을 수 없다. 청문회 이후 정동영은 스타 정치인으로 등극했지만,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다. 사실 정동영이 '살인하지 말라'고 조남호를 몰아세우며 들고 있던 사진 속의 노동자들이 노무현 정부 때 죽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진 이양진

희망버스가 계급적 요구와 연대를 상징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자, 보복 탄압이 시작됐다.

비전

심지어, 조남호는 물러설 생각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의 사기 고조와 투쟁 확산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리해고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할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재벌 · 정부를 압박해야, 저들은 '양보하지 않아서 생길 손해가 양보할 때의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러설 것이다.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는 그런 투쟁을 건설하기보다 민주당 등과 보폭을 맞추며 순환휴직 등 선제적 양보안 제시와 중재에만 힘을 쏟고 있다. 조남호는 모두 거부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것은 투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4차 희망의 버스가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운동은 그동안 주요 고비를 넘기며 발전해 왔다. "1차 땐 공장 담장을 넘고, 2차 땐 기만적인 [노사] 합의를 넘고, 3차 땐 정부 여당과 수구집단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넘고, 이번엔 청와대와 경찰의 훼방을 넘었다."

그동안 이 운동은 승승장구해 왔고 주도적 활동가들은 운동의 한가운데서 제기된 첨예한 정치적 논쟁에서도 비교적 훌륭하게 대처해 왔다.

예컨대, 이들은 채길용 집행부의 배신을 비판했고, 정리해고 · 비정규직의 불가피성 주장에 일침을 가했고, 연대 투쟁이 대안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런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고 대중의 자신감을 고무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 노동조합운동에 더 개입주의적이어야 한다. 상층 지도자들의 타협적이고 온건한 태도에 비판적일수록 더욱 더 개입해서 좌파적 압력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송경동 시인은 얼마 전 "더 큰 힘으로 5차 희망의 버스를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금속은 파업을 결의하자"고 했다.

정말이지, 이제 희망의 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5차 희망의 버스는 민주노총과 공동 주최하고,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적극 끌어내야 한다.

박설

▶ 관련기사 15면

야비한 보복에 광범한 방어 운동으로 맞서자

경찰이 '희망의 버스'에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3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를 쏘고,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경찰의 강경 기조는 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반발과 분노에 직면해, 무력 말고는 기댈 게 없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거나 입건된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이 2백 명이 넘는다. 경찰은 희망의 버스 기획단 중 열한 명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탄압에 잘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저들이 우리의 기세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의 버스 기획단이 소환 · 진술 거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집단적인 저항을 결정한 것은 올바르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진술을 거부하되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는데, 이를 개인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최대한 설득해 소환 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정치적 항의 표시다. 자칫 생길 연행 · 수배를 감수하고라도 정부의 공세에 투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소환 불응은 경찰 탄압의 부당성을 폭로할 수 있고, 우리의 정당성을 더 선명히 할 수 있으며,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의 사기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도 3차 희망의 버스 이후 세 차례 출두 요구서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5차 희망 버스의 더욱 힘찬 발진을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을 비롯해 제 진보진영과 함께 반민주적 탄압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켜 광범한 방어운동으로 맞서야 한다.

조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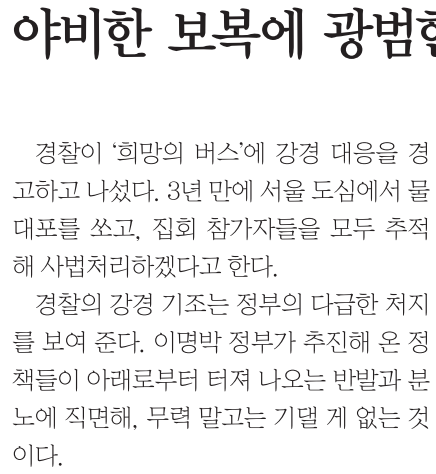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쓰라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낸 것은 정치적 ·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진보운동의 도덕성과 대의를 훼손했다.

곽 교육감은 "부패 비리 '꽉' 잡는 진보 단일 후보"임을 내세우며 당선했고, 취임 이후 비리를 저지른 교육 관료들을 단호하게 퇴출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펴 왔다. 부패로 찌들었던 공정택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곽 교육감의 이런 정책을 지지했음은 물론이다.


사진 이양진

박명기(좌)와 곽노현(우).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침통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그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심지어 '사실 무근이고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까지도 말이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 최소 수억 원은 써야 하는 선거제도의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곽 교육감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진보운동의 대의를 훼손한 곽노현 교육감은 미련을 두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심정은 쓰라리고 침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물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략적인 표적 수사였음은 명백하다. 온갖 더러운 추문의 당사자인 검찰은 항상 권력의 심부름센터 구실을 해 왔다. 이번에도 검찰은 무상급식 투표에서 우파의 패배 직후 곽노현 사건을 터뜨리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서는 권력자를 비호하고 은폐하기 바쁘던 검찰이 이번에는 조중동과 손잡고 온갖 과장과 음해를 통해 진보진영을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부패 원조인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이용해 "깨끗한 보수와 나쁜 진보"를 운운하는 것도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다.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는 "부패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곽 교육감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당장 청와대와 한나라당부터 모두 물러나야 한다.

▶ 3면으로 이어짐

무상급식 투표 승리 이후

이제 부자 증세·복지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정선영·전지윤

▶ 1면에서 이어짐

결국, 오세훈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이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신세가 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역의 투표율은 무려 60퍼센트에 육박한 반면 종로구 창신동은 13.4퍼센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 투표가 계급투표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번 결과는 재벌 · 부자들만을 대변하는 이명박과 우파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줬다. 노동자 · 민중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라는 대중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줬다.



사진 이미진

"셀프 탄핵" 당한 오세훈과 우파 한끼에 13만 원짜리 식사까지 하면서 3천 원도 안되는 아이들 급식비를 안 주려고 하다가 쫓겨나다.

발판

이번 승리는 우선 진보진영과 노동계급 · 피억압 민중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고취할 수 있다. 지난해 6 · 2 지방선거 승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명박에 맞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광범하게 계급연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더 강화될 것이다. 요즘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이 이런 주장을 하며 구심점 구실을 노리는 듯하다.

반면, 이번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하고 우파들 사이의 분열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파들 내에서도 대중의 불만이 더 크게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지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두언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박근혜가 오세훈이 내민 손을 끝까지 뿌리친 것 때문에 조갑제는 "박근혜 부숴버려야"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번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로 결집한 우익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보다 더 우파적인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결국 정치적 양극화는 이번 투표를 계기로 더욱 격화할 것이다. **특히 근래 나타난 세계경제의 더블딥 위기 조짐은 자본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커다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 위기에 부자 ·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임무와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평범한 사람의 불만을 관리해야 하는 모순된 압력 속에 처해 있다. 세계경제 위기가 심해질수록 이런 모순된 압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오세훈처럼 정면돌파하자는 세력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미 이명박은 대중의 불만을 짓밟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다. '왕재산' 마녀사냥과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대한 대대적 탄압, 곽노현 표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갑자기 귀국한 것도 의심쩍다. 검찰은 이명박의 부패를 밝혀내기보다 이것을 이용해 민주당만 흠집내려 할 것이다. 물론 레임덕 상황에서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런 공격에 맞서며 이번 무상급식 투표 승리를 발판 삼아 더 많은 복지를 바라는 대중의 열망을 행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의료 · 무상보육 · 반값 등록금과 같은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정쩡하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하지만 진보 진영은 '재벌과 부자들의 돈으로 노동자 · 민중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0·26 재보선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선일까?

오세훈 사퇴로 판이 커진 10월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권연대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시장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독자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조차 "서울 시민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다수의 노동자들도 무상급식 투표 승리가 가져 온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라도 한나라당을 패배시키고,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기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서는 십분 공감할 만하다.

게다가 야권연대가 선거 득표와 승리에 대체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권단일 후보가 당선하면 대중은 환호하진 않아도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낭패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우파 정서에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중이 개혁적이라고 여기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10월 재보선에서 진보진영은 민주당과는 구별되는 선거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의 선거적 이익보다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대안을 건설하는 과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는 선거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 개혁과 그것을 가능케 할 투쟁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인천공항 매각과 인천대 법인화, 영리병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지사 안희정도 복지 정책을 훼손할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고, 전북도지사는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은 개혁을 추동할 핵심 동력인 노동자 투쟁과 계급의식을 갉아먹는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키는 데 도움을 줬지만, 동시에 노동자 투쟁에 제동을 거는 구실을 했다. 현대차와 KEC 등에서 공장 점거파업을 벌였을 때 야당 의원들이 점거를 풀라고 압박했던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용해돼 버리면 선거에서도 진보가 독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위기 시기 한국 사회 방향을 둘러싼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논점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처럼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복지도 확대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9월 안에 통합 진보 정당 건설이 성사된다면 독자 후보를 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보 후보가 투쟁의 대의를 방어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얻는다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 2면에서 이어짐

보수 우파는 그들의 전통과 성격, 계급적 기반 자체가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이번 사건은 진보의 전통과 원칙에서 일탈해 기성 정치권의 부패한 관행에 타협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친민주당 후보였고 진보 교육운동과 연계가 거의 없던 박명기와의 무원칙한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가치와 정책, 무엇보다 계급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원칙있는 단일화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곽노현 교육감이 기성 체제와 타협해서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민주노동당 후원 문제로 1백69명의 교사들이 파면 · 해임될 위기에 놓였을 때, 법적 절차에 따르라는 실망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원평가나 일제고사에 타협한 것도 문제였다. 투쟁보다 타협을 할 때가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파들은 이번 일을 이용해 진보진영과 진보적 대의와 운동 전체를 매도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만회하려 한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반동적 공격에 이 사건을 이용하려 한다. BBK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의 법률 전담반 노릇을 한 법무법인 '바른'이 박명기를 변호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우파들이 전세 역전에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우파들은 곽 교육감의 잘못을 이용해서 그가 추진했던 체벌 금지, 청소년 인권 보장, 무상급식, 경쟁 교육 완화 등의 진보적 정책까지 도매금으로 매장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물론, 이번 경험은 우리가 진보교육감을 무비판적으로 추수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줬다. 우리는 진보교육감이 아래로부터 투쟁의 요구를 대변하고 실행할 때는 지지해야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우파의 공세에 타협하거나 대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분명하게 비판해야 한다. 진보적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할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교육개혁 운동 자체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보수파들의 반발을 뚫고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의미있는 진보와 개혁을 이루기 위한 투쟁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

백은진

꼴라주 ⑤⑦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최종병기 검(檢)



일루젼

8·28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정의 의미

제대로 된 통합 진보 정당 건설 운동의 일차 승리

이 글은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통합 진보 정당 건설 문제에 관해 8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다.



사진 이미진

8월 19일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회의장 앞에서 열린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기자회견 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오른쪽)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8월 2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9월 안에 통합 진보 정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그동안 핵심 걸림돌 구실을 했던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면서 진보대통합의 앞날은 더 밝아졌다. 이로써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위해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해 온 진영은 일차 승리를 거뒀다.

애초 민주노동당 핵심 지도자들의 참여당과의 통합 의지는 강경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의 5.31 합의문 발표 직후부터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참여당에게 신호를 보냈고, 유시민과 공동으로 나눈 대담을 엮은 책까지 출판하고 '북 콘서트'도 열었다.

참여당까지 포함한 통합 정당으로 몸집을 키워야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넘볼 수 있고 대선에서는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나 연립정부 수립까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계산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참여당이 이데올로기, 정책, 실천, 특히 계급적 기반에서 진보정당과 구분되는 자유주의적 친자본가당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했다. 심지어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무산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

이 때문에 진보양당의 통합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민주노동당 당대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렬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당대회 전날인 8월 27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통합 진보 정당 창당 이후 참여당 문제를 논의하자'는 진보신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물론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 있을 것이다. 먼저, 최근 문재인이 야권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시키기 투쟁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시 바삐 진보대통합을 성공시켜야 더 효과적으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을 법하다.

성찰

게다가 검찰총장 한상대가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취임한 이후 '왕재산' 마녀사냥과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 투쟁에 대한 대대적 탄압,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정권과 우파의 전방위적 공세가 진보의 단결 필요성을 절감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정치 상황만으로 진보대통합이 급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객관적 정치 상황보다 더 중요한 점은 주관적 요인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다함께와 민주노동당 안팎의 좌파가 벌인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 지지,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상황 변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먼저 6월 19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교체 시도를 막지 못했던 점을 자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불명료함 때문에 성공적인 캠페인을 건설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민주노동당이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을 기반으로 조직 노동계급과 연결돼 있는 개혁주의적 노동자당이며, 그런 기반에서 오는 상이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했다. 사실,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 때는 이런 명확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다 보니 동맹 구축보다는 부지불식간에 선전주의적 방식으로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동맹 구축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기반과 성격 때문에 전 · 현직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태도가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 간부들 및 활동가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했다. 설령 산업 현장의 투쟁에서 전투적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동맹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노동조합 쟁점에서의 태도가 정치 쟁점에서의 태도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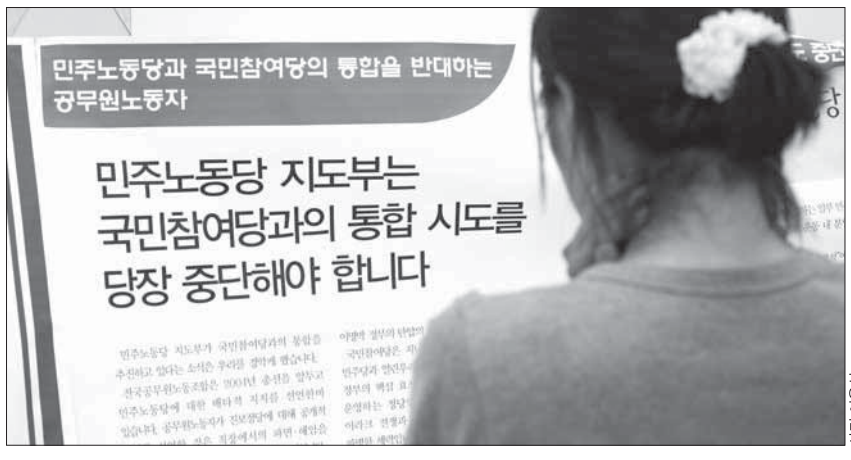
게다가 적지 않은 선진 노동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노조 간부들은 2008년 초의 분당 사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지속돼 온 상호간 앙금을 해소하고 싶어했고, 민주정부 10년의 어두운 기억 때문에 참여당과의 통합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가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노조 간부들은 내년 선거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당과의 통합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고 동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위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건설에 매진했다. 노동조합 · 진보진영 지도자들과 폭넓은 동맹을 구축하면서도, 그것에 의존하느라고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선전 · 선동과 캠페인 건설 노력을 방기하는 과오도 경계했다. 제대로 된 통합을 바라는 아래로부터 목소리를 키움으로써 노동조합 ·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더 자신감 있게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런 운동의 결과, 8월 27일까지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무려 2천8백72명이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서명과 선언에 동참했다. 8월 19일에는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회의장 앞에서 현대차, 쌍용차, 기륭전자 등의 투사들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정희 대표에게 직접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전여농, 진보교수 · 연구자, 보건의료인,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대의원 일동의 성명도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안에서도 권영길 · 강기갑 의원 등이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부 반영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도 '양당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던 것이다. 그래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압력이 가해졌다.

양당의 극적 타결 직전에는 민주노총 부대변인이 직접 이정희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고, 빈민 3단체가 '참여당이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며 민주노동당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참여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조국 교수조차 이정희 대표에게 "밀어붙이면 통합에 반대하는 서명까지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고 충고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런 압력 때문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8월 27일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진영이 찍사

8·28 민주노동당 당대회장에 부착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대자보들

승리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정희 대표의 결단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 내 '당권파'는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다. 그것이 바로 8월 2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제출된 '참여당을 포함해 통합 진보 정당 건설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수임기관에 위임해 달라'는 안건이었다.

이것은 바로 전날의 합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것이 통과되면 다시 진보신당과 갈등이 불거지며 진보대통합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컸다. 당권파 지도자들은 '수임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법적 필요 때문'이라고 둘러대며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먼저라며 참여당과는 단계적 통합을 주장하던 민주노동당 '비당권파' 지도자들도 이 안건을 지지했다. 참여당과의 통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 이런 태도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당대회에서 당권파의 대변인 구실을 하며 이 안건 통과를 위해 앞장섰다.

이 때문에 이 안건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단일안이 됐고,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우리와 함께 통합 반대 캠페인을 해왔던 활동가들 중 일부도 흔들렸고, 그래서 우리도 큰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이 안건의 정치적 성격이 바로 전날의 극적 타결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단호하고 굳건하게 이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당대회에서 질의 응답과 주장들이 이어질수록 우리의 판단과 전술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안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다소 흔들렸던 사람들도 태도를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이 안건을 거둬들이고 수정안을 내야 했다.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위해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한 진영이 그것을 거스르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으며 다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따라서 진보의 분열과 진보적 정체성의 훼손을 낳을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해서 헌신적인 운동을 건설해 온 우리 모두는 이 성과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다. 특히 다함께로서는 지난번 강령 후퇴 저지 투쟁의 패배가 쓰라렸던 만큼 이번 성과가 더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상황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진보대통합을 야권연대나 연립정부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으려 하면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민주노동당 지도자 다수의 시도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야권연대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참여당과의 통합 노력을 재개할 것이다.

또, 일단 공을 넘겨받은 진보신당 지도부도 1백 퍼센트 신뢰할 수는 없다. 물론 진보신당 지도부는 현재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에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양보하며 단일화를 했던 것은 바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였다. 진보신당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에 대한 일관되고 철저한 반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 진보 정당이 계급간 연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되기를 바라는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은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통합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투쟁하면서, 제대로 된 통합 진보 정당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의회·정부를 통해서만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보 양당의 통합만으로는 이런 목표 달성이 힘드니까 참여당과도 통합해 덩치를 키워 민주당과 대등하게 연립정부를 추구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지도자들 상당수의 생각인 듯하다.

자주파 경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참여당 8문 8답'이란 문건은 "2012년 … 진보개혁진영의 다수파 국회를 형성하여 … 각종 노동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그것이] 노동운동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전략적 돌파구"라고 주장한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도 "대선을 통해 진보정당이 연합 정치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과 같은 곳의 인사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실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당 대표 유시민도 최근 〈레디앙〉 인터뷰에서 "[진보 양당 통합으로] 무슨 현실을 바꾸는 일을 도모하겠는가"라며 "권력의 일부로 노동 · 사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싫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의회나 정부에 진출해서 권력을 공유해야지 실질적인 진보 ·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의회나 국가기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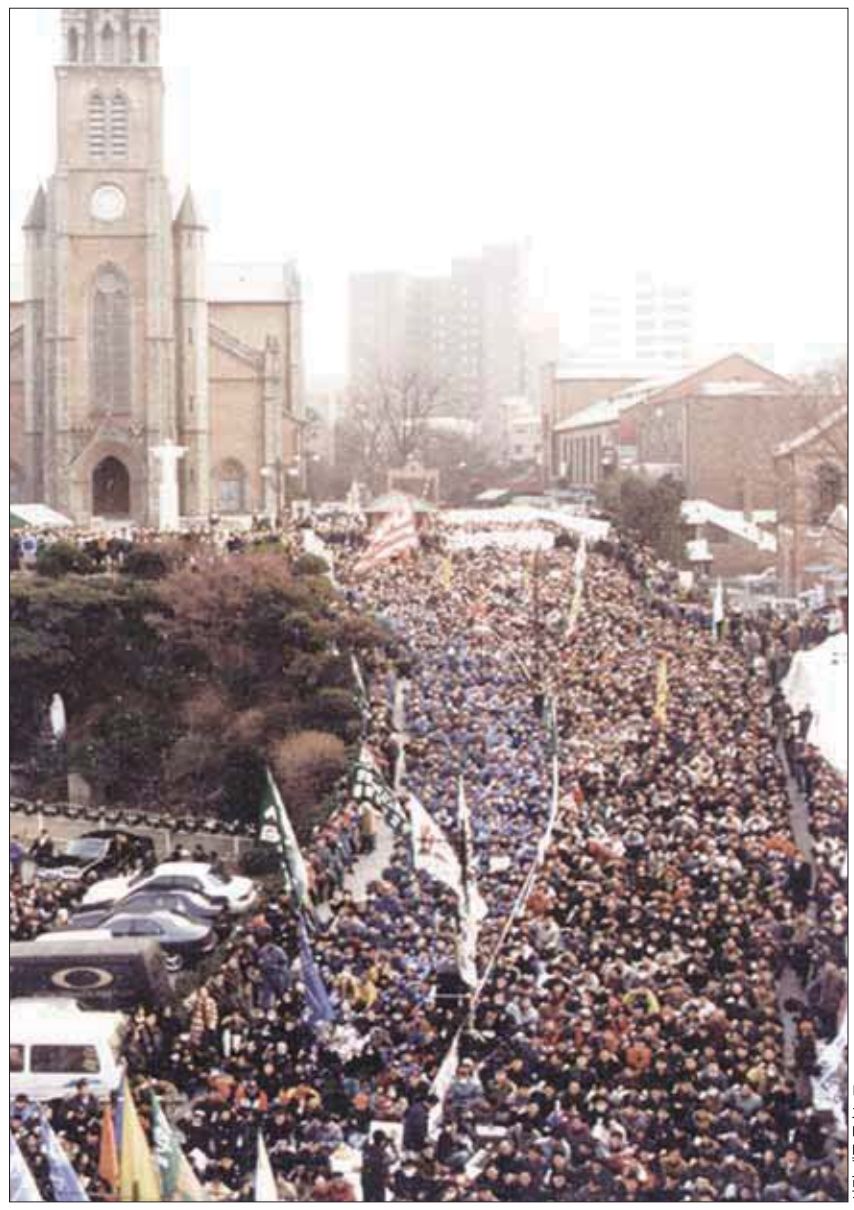


사진 제공 금속노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97년 대중파업으로 노동자들은 당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지배계급은 굴욕적으로 후퇴했고, 1년 뒤 일당국가가 해체됐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본격화됐다.

관료 집단

이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민주당과 연립정부 구성하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의회와 정부에 진출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사회를 뜻대로 바꿀 권력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노무현이나 오바마는 정권을 잡고 의회를 장악하고 나서는 약속했던 개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했을까.

이에 관해 노무현 정부 내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은 시사적인 증언을 했다.

"관료집단 커뮤니티는 … **관료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고객 집단까지를 포함**[한] … 일종의 **네트워크**이고 … 커뮤니티의 정서가 때로는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철학이나 정책보다 우선합니다. … [예컨대]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나 국세청이 쥐고 … 청와대에서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나 대통령도 대기업과 관료, 보수 언론 등이 맺은 이 항구적 "네트워크"의 전방위적 압력과 노하우를 극복하기 힘들다. 국가기구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겨레21〉이 인터뷰한 대기업의 고위 임원도, 지금은 한나라당마저 '좌클릭'하며 재벌을 욕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앞으로 잘해 보자고 손을 내밀 것"이라며 "누가 집권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병준은 "집권해도 세상 그렇게 못 바꾼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유시민도 올해 1월 한 토론회에서 "막무가내로 대통령이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실제 그것이 현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고 집권 시절 경험을 털어놓은 바 있다.

노무현이 4대 개혁 입법 실패 후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말했다가 퇴임 후에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는 등 오락가락한 것은 이런 무력감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주류 지배자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의회나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길 땐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차 없이 선출된 권력을 무력화하려 한다.

> 법 개정을 통해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생각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대중투쟁의 힘이 강력해야 악법을 막거나 개혁 입법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파들이 타협적이던 노무현조차 '탄핵'하려 했던 것이나, 별 볼 일 없는 수준이던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조차 사법부가 위헌 판결을 내려 무력화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자기 제한

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들도 있다.

1970년 칠레판 민주대연합으로 집권한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비밀리에 주류 엘리트들에게 기존 헌법 준수 서약까지 했는데도 집권 내내 관료 조직의 사보타주와 기업주들의 파업, 언론의 마녀사냥, 군부의 쿠데타 음모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아옌데는 자신이 임명한 참모총장 피노체트가 일으킨 유혈 쿠데타를 통해 제거됐다.

이런 사례들은 단지 의회 · 정부에 진출한다고 개혁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주류 지배자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맞선 아래로부터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개혁 노선은 "투표로 심판하자"며 노동운동이 선거 때까지, 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투쟁 방법뿐 아니라 투쟁 목표도 자기제한적으로 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가 야5당이 주도한 희망시국대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낮춰진 것이 한 사례다.

그러나 주류 지배자들은, 특히 경제 위기 시대에 오직 대중투쟁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해 적당한 양보로 대중과 온건파 저항 지도자들을 달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느낄 때 양보에 나선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생각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대중투쟁의 힘이 강력해야 악법을 막거나 개혁 입법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1996년 민주노총이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 준비를 마치고도 국회 논의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를 바라보며 파업 실행을 미루자, 김영삼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정권은 도리어 그해 말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다.

뒤늦게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은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는 대중파업으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정리해고법' · '안기부법' 등 악법들을 철회시켰다. 진보 국회의원 한 명 없이도 투쟁의 힘으로 대통령 사과를 받고 악법을 막아 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그 노동악법들을 다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보다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원단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개혁의 진정한 동력이다.

"아래로부터 쟁취한 개혁은 계급 조직을 강화하고, 그리하여 미래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위에서 선사한 개혁은 수동성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시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영국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의 경고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

김문성

어떠한 통합 진보 정당이 돼야 하는가

먼저 갈라진 두 진보정당이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 진보 양당의 분열이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단결에 악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진보정당 분열로 인해 현장 대중조직을 분열시키고 조합원들 간 … 사사건건 분열이 심화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말한다.

그 점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해 진보 양당 통합을 파탄내려는 것도,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를 핑계로 아예 진보 양당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 진보의 원칙에 동의하는 진보적 시민 · 사회단체와 급진좌파 등이 폭넓게 합세해 진정한 진보의 단결을 이룬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민주당과의 동맹)의 사전 단계나 부속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목적은 민주대연합이므로 일관되게 진보대통합을 추구할 수 없게 되고 진보의 분열을 불러오게 된다. 참여당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대통합이 결렬 위기까지 갔던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 줬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의 사전 단계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위한 진보대통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에서 당명에 '노동'이 포함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통합 진보 정당은 단순히 선거 대응만이 아니라 대중투쟁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단결해서 투쟁하자는 노동자들의 열망이 진보대통합의 기초가 돼야 하며, 단결과 투쟁만이 진정으로 지배자들을 압박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투쟁 속에서 생기는 동지적 신뢰만이 그 어떤 제도보다 더 통합 진보 정당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투쟁 건설

따라서 통합 진보 정당은 공동 투쟁의 과제를 중심으로 건설돼야 한다. 비정규직 해소, 무상의료, 핵발전 폐기, 보안법 철폐, 파병 반대, FTA 반대 등 지난 5 · 31합의문의 '20대 주요 정책과제'가 그런 요구다. 이번에 진보 양당이 잠정 합의한 강령 초안에 담겨 있는 요구들도 마찬가지다.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은 바로 이런 요구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 소유권에 도전하며 노동계급이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하다. 지난번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때 제거된 반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다시 복원돼야 한다.

통합 진보 정당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은 느슨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진보 양당 사이에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정치적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정치경향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이견에 대해 논쟁하면서도 단결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전선적 방식으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통합 진보 정당은 노동자들의 관심과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투지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10호(2011년 여름) 가격 : 16,000원

특집 | 진보진영 집권 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연립정부가 "진보정치의 집권 전략"이 돼선 안 되는 이유 _ 김인식
진보-개혁 연립정부는 지속 가능한가? _ 크리스 하먼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정부인가? _ 크리스 하먼, 팀 포터

쟁점 | 운동 내 이슈들
일본 핵발전소 사고와 반핵 운동의 과제 _ 장호종
소셜 미디어와 사회운동 _ 조니 존스
장하준과 그의 제도주의 비판 _ 이정구
오늘날의 학생운동 _ 정병호
사노위의 실패가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_ 전지윤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 _ 폴 블랙레지

현대 진보사상 조류
토니 네그리, 맥락 속에서 보기 _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주의 고전 읽기
《임금 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
마르크스와 임금 인상 투쟁 _ 김재헌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탈출구가 안 보이는 세계경제 위기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로 큰 혼란에 빠졌던 주식시장이 진정되는 듯하지만, 이제는 '9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화"를 특집으로 다뤘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에 일본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자산 거품이 꺼지고, 은행 부채가 크게 늘고, 주식시장이 붕괴해 온 나라가 20여 년간 침체에 빠졌다.

현재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두 핵심 기둥, 다시 말해 미국과 유로존에 집중돼 있다. 양쪽 모두 국가 지출을 대폭 늘리는 부양책으로 2008년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러한 부양책에는 사적 부문의 부채를 공공 부문의 부채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몇몇 경우에,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치계가 주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공화당 우파는 위기를 틈타 자본가들의 이익에 맞춰 국가 지출을 줄이고 지출의 우선 순위를 바꾸려 한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같은 유로존의 약체 국가들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ECB)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나라들은 그 대가로 긴축 정책 실시를 강요받았고,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부채가 늘고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긴축 요구가 커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더 큰 나라들로 번지고 있다. ECB는 그리스 구제금융 직전에 취했던 조처를 본떠 이들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비상" 매입하기 시작했다.

대서양 양편 모두 상황을 진정시킬 새로운 방안을 절박하게 찾고 있다. 그래서 유로존에서는 일부가 "유로본드(개별 정부가 아닌 전체 유로화 통화권에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압력

그러나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유로본드 도입이란 곧 독일 국채를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국채와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독일의 대출 비용을 늘린다며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미국에서는 뭔가 시장을 진정시킬 조처를 취하라는 압박이 연준 의장 벤 버냉키에게 강하게 쏠리고 있다. 그러나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두고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정치적으로 지리멸렬한 상태가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배자들이 저마다 제 나라에 기반한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따라서 확연히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하면서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시장과 정치인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한 가지 가능성, 다시 말해 빠른 경제 성장의 가능성은 훨씬 요원해 보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다.

독일 경제가 4월부터 6월까지 겨우 0.1퍼센트 성장하고 프랑스가 성장을 완전히 멈추면서 유로존 전체의 성장률 예상치도 낮아졌다 .

금융기업 CEO인 찰스 슈왑은 이렇게 썼다. "우리 경제가 강력했다면, 아마도 유럽의 이런 근심거리들을 무시해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표들은 경제가 완전한 침체 상황임을 보여 줄 뿐이다. 우리는 수평 비행을 했고, 지속적인 경기 개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음울한 전망은 2007~2008년에 발생한 문제의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안와르 샤이크는 미국 경제의 비금융 부문 이윤율이 1947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꾸준히 하락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그 이후 이윤율은 안정을 되찾지만, 그것은 단지 노동자 착취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양상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의 격변 때문에, 빠른 성장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윤율을 회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곧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뜻이고 체제를 구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사회주의자는 이와는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반격에 나서게 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좌파는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 점점 더 통제불능이 돼 가는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정종수



사진 이미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상담하는 사람들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래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한국 금융이 특히 불안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외화 조달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유럽에서 재정 · 금융 위기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내 금융 부실도 점점 커지면서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8백조 원이 넘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부동산 사업 대출에 따른 부실로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 9월에 시작될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15개 저축은행이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건설회사들도 회수가 안 되는 위험자산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거의 모든 건설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가계부채, 저축은행, 건설사 등의 위기가 결합된다면 부실 채권이 계속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위기와 비슷하게 금융 불안정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EU와 미국에서 재정 · 금융 위기가 높아지면서 실물경제도 침체하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EU와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다. 그런데 지난 7월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5퍼센트로, 6월 증가율보다 9퍼센트포인트 줄었다. EU 수출의 경우 6월에 10퍼센트 감소한 데 이어 7월 수출도 15.3퍼센트 감소했다.

게다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긴축을 강화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 중 상당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시 수출되는 중간 제품이어서 미국 · 유럽의 위기는 한국 수출 전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수출의 감소로 8월에는 1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대기업들의 순이익도 감소하고, 제조업 활력도 떨어지는 등 경제 전체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위기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 경제의 높은 불안정성은 1997년 위기 이후 한국 경제 변화와 관련 있다. 당시 IMF 경제 위기는 단지 금융 위기가 아니었다. **그 뿌리에는 소위 '한강의 기적' 동안에 계속된 과잉축적이 가져온 이윤율의 저하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IMF 위기 전에 이미 재벌과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은 낮아져 있었다.

위기 이후 한국 지배자들은 낮아진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생산물에서 자본가들이 차지하는 몫(마르크스의 용어로 착취율)을 늘리려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등 저임금 노동을 확대했다.

이 때문에 GDP 대비 임금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퍼센트에서 2000년 58퍼센트로 급격히 떨어졌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민간 소비도 감소하자, 이를 지탱하려고 가계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 7면으로 이어짐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장호종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당인 한나라당이 이 정도 충격으로 '보편적 복지' 같은 개혁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쉽지 않을 것이다.

부자 감세 철회나 세금을 늘리려는 시도는 지지층의 반발과 분열로 이어질 것이고, 감세 정책을 유지한 채 복지를 늘렸다가는 재정 적자가 커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유럽 나라들의 추락은 이런 불안을 한층 증폭시켰다.

그래서 홍준표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약탈 행위"라며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했고 이명박은 보란듯이 제주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경제관료 출신 임채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면 부자는 제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거짓말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0만 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당연히 이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복지가 늘지도 않았다.

사실 이명박은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복지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자 감세는 할지언정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선별 작업들 자체가 전체 복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들인데다 그 자체가 낭비적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 하에서는 복지가 확대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더 손쉽게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부와 기업들에게 복지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보편적 복지에 한사코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사진 이미진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을 축하하는 시민들 '부자 증세'로 노동자 민중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8월 29일에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의 복지국가 구상'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감세 철회 등 조세 개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국고 지원 확대, 낭비적 지출 축소 등 그럴듯한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어떻게 자본가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그런 정책을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자 증세 같은 방안을 한사코 피하려다 보니 필요한 재정 규모 자체를 지나치게 작게 잡기도 한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일부 보수층과 부유층의 논리에 굴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무엇보다 민주당의 재정 계획은 한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들이다.

"재정 건정성이 훼손되면 복지지출이 오히려 국가발전의 독이 [된다]"는 민주당이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한 말을 실천으로 옮기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민주당과 손을 잡고 보편적 복지를 이루겠다는 진보진영 내 일부 지도자들의 생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참여당과의 통합이나 민주당과의 선거동맹을 추진하면서 부유세 같은 진보정당의 급진적 대안을 일부 후퇴시키려 했다.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강령을 후퇴시킨 것도 앞으로 복지 대안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하는 이전 강령은 경제 위기 시기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에는 이런 내용이 다시 포함돼야 한다.

최근 공공노조 산하의 사회공공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서 오건호 실장이 다시 보편적 증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첫째, 오건호 실장은 당장 필요한 복지 재원 65조 원 중에 35조 원은 평범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소위 '참여재정 방식'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일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4퍼센트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방안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다.

둘째, 앞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인데 이 보고서에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아예 빠져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오건호 실장은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새로운 복지 주체 형성'은커녕 실제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을 뿐이다. 진보정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자본가들의 저항을 물리치려면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데 조직 노동자들만이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일관된 복지 대안과 이를 실현시킬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 6면에서 이어짐

2003~04년에 카드 거품이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 지배자들은 줄어드는 민간 소비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을 늘렸다. 2000년까지는 미국의 IT 호황에 따라 대미수출을 늘렸고, 그 후에는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요컨대, 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윤을 확보하려는 시도 때문에 민간소비가 줄어들자, 가계대출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수출을 늘려 대외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런 변화가 누적돼 현재의 한국 경제의 높은 불안정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명박이 지난 4년간 한 일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부유층과 기업주를 지원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자본가들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법인세를 깎아 줘 부유층 · 대기업에게 수십조 원을 퍼줬고, 4대강 사업과 다양한 지원금 · 세금혜택 등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 · 해운 · 건설업체 등을 지원했다.

수출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자 석유 · 식품 등의 물가가 급등하면서 대중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2011년 실질임금도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4퍼센트나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 금융부실이 악화할까 봐 거듭 부동산 부양 정책은 내놨고, 그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금융 불안정성은 더 높아졌다.

물가는 계속 치솟았고, 일자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쌍용차 ·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자본가들은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노동자 · 민중에게 엄청난 고통을 전가했다.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를 노동자 · 민중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전혀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제 다시 위기가 다가오자 또다시 우리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하고, 기업들의 이윤을 통제해 공공요금 · 식품값 · 전셋값 등의 물가를 낮춰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무상 교육 · 의료 · 보육 · 임대주택를 도입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복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할 뿐 아니라 부유세 도입, 군비 축소 등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며 자신감이 높아진다면,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강동훈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우석균, 〈레프트21〉 46호)

그런데 '야권 공조'로 한미FTA를 막겠다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뒤통수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송민순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분명해질 때 우리도 상정할 것을 약속한다"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번 한EU FTA 때처럼 말로는 저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비준안 통과를 묵인하려 하는 듯하다. 그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비준안 상정을 허용했고 결국 본회의에서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 줘서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를 허용해 줬다. 민주당만 믿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들과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한미FTA를 체결한 당사자이자 지금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맞서 일관되게 싸우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기력

문제는 진보진영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권 공조'를 깨지 말아야 한다며 이 타협안을 조건부로 승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압력이 진보정당의 의원들을 통해 한미FTA 범국본으로도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설사 민주당이 타협하더라도 야권 공조 파기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말이다.

진보진영의 일부 지도자들이 민주당과의 동맹에 얽매여서 운동의 발목이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한미FTA 범국본의 '한미FTA 폐기' 요구를 민주당의 요구인 '재협상'으로 후퇴시키려 한 바 있다.

이런 후퇴는 운동을 분열시켜 한미FTA 반대 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한미FTA 범국본과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동요와 배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한미FTA 비준을 막기 위한 행동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9면 정성진 칼럼에 실린 그래프가 편집디자이너의 실수로 잘못 실렸습니다. 글을 써 주신 정성진 선생님과 독자들께 이번호 지면을 빌어 사과드립니다. 정성진 선생님이 보내 주신 원본 그래프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이 글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맑시즘 2011(주최 다함께) 마지막 날인 7월 24일에 강연한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를 녹취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석학이자 활동가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번 방한에서 이 외에도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등 다양한 주제로 연설했다. 이 중 일부를 앞으로 지면에 실을 예정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 첫째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내재한 모순들에 관한 이론이다. 이 점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처음 제시했고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자본주의 위기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방식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 위기 이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 위기는 정치인들의 어리석은 실책이나 자본가들의 지나친 탐욕 때문에 빚어지는 사고 따위가 아니다(물론 어리석은 정치인들과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오히려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속성에서 비롯한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유기적 위기'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 냈다. 이 유기적 위기라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 내내 수 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던 평범한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극에 달한 탓에 그러한 모순을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유기적 위기는 특히나 뿌리가 깊고 또 오래 지속된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유기적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좌파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현재 위기를 '제3의 대공황'이라고도 했다. 즉, 그는 현재의 위기를 19세기 말의 대공황과 그보다 더 심각했던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교하는 것이다.

참고로 그람시가 유기적 위기 개념을 개발한 것은 바로 30년대 대공황의 맥락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람시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더욱 시의적절하다.

유기적 위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어떤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성장률을 거론하며 이번 위기가 사실상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기적 위기를 포함한 모든 경제 위기는 언제나 불균등하다. 1930년대에도 일본을 비롯한 몇몇 '주변부' 경제들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체제의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호경기를 누리고는 있지만 세계경제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북미와 유럽 경제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게다가 중국의 호황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도 커다란 의문이다.

유기적 위기

그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둘째 의미로 넘어가 보자.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이론으로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 놀랍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환원론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 위기는 잘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 줄 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정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 그람시 등 최상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언제나 당대의 핵심 정치 쟁점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개입하려 해 왔다.**

마르크스는 토대와 상부구조를 구분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토대는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경제에 해당하고 상부구조는 그 토대 위에 자라나는 정치, 법률 등의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토대—상부구조론을 근거로 마르크스가 상부구조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마르크스는 상부구조가 사람들이 계급 갈등에 눈뜨게 되고 계급 투쟁을 벌이게 되는 정치적 · 법률적 · 이데올로기적 장이라고도 말했다. 달리 말하면, 경제 위기를 낳는 구조적 모순은 생산의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그러한 모순의 해결은 무엇보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람시도 표현만 바꿔서 같은 말을 한다. 그는 유기적 위기가 발생하면 서로 다른 사회 세력들이 위기에 대해 저마다의 해결책을 관철시키려고 서로 투쟁하는 정치 지형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 끝에 결국 어느 사회 세력의 해결책이 관철될지는 전혀 결정돼 있지 않다. 그람시가 살던 이탈리아의 경우 결국 파시스트들이 승리했고 그람시 자신도 투옥됐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둘러싸고 여러 사회 세력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배계급이 공세를 벌이고 있다. 지배계급의 공세는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지만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공세의 본질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데 있다. 애초에 신자유주의가 이번 위기를 촉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미친 짓이지만, 어쨌든 지배자들은 이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세가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 아랍 혁명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토대와 상부구조

이 점은 오늘날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세 번째 의미와 연결된다. 계급 투쟁의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임금노동과 자본의 적대 관계가 현대 사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야말로 자본주의가 직접 생산자들로부터 잉여 노동을 강탈해 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적대 관계가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계급 적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이되고 은폐된다. 아이러니이게도 때로는 자본가들이 오히려 이러한 적대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의식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자본가들이 매우 의식적으로 수행한 계급투쟁의 일종이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고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계급투쟁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급진 좌파의 상당수는 이러한 계급 갈등의 중요성을 자본가들만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은 사회 세력으로서 노동계급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 비공식 노동이 등장함에 따라 노동계급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주의 사상가인 하트와 네그리는 혁명적 주체로서 노동계급은 경계가 훨씬 더 모호한 세력인 '다중'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첫째 반론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노동 형태의 변화들은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이다.



맑시즘 2011에서 연설하고 있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진 이형진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임금노동이 현대 산업 자본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임을 상세한 분석을 통해 보여 줄 뿐 아니라, 19세기 영국에서는 안정적인 형태의 임금노동과 더불어 대량 실업이, 그리고 훨씬 더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다른 형태의 노동이 공존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는 21세기의 자본주의도 19세기의 자본주의와 닮았으며 19세기의 자본주의로 회귀한 듯한 면도 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이처럼 안정적인 임금노동과 불안정 노동이 공존했음에도 매우 투쟁적인 노동자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한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임금 노동자들이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그들의 처지를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영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정확히 그러한 사례다. 19세기에 영국 항만 노동자들은 전형적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었지만 20세기에는 전형적인 조직 노동자들로 변모했다.

그런데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네그리는 잘 조직된 공장 노동자들을 '룸락'에 비유하기도 했다. 룸락은 혁명 전 러시아의 보수적이고 부유한 농가를 일컫는 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따르자면 노조에 조직돼 있고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노동자들이 무노조 · 저임금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측으로서는 잘 조직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기가 쉬워진다. 기업주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말할 때 그들의 의도는 모든 노동자들을 불안정 · 비공식 노동자들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계급 전체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 즉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임금과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계급 전체에 이롭다.

다른 한편으로, 임금 노동자들이 어째서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은 착취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처지가 끔찍해 보이며, 실제로도 끔찍하다. 그러나 착취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착취 당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착취 당한다는 것은 곧 자본가를 위해 이윤을 창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며, 따라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경우 자본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반면 이러한 착취 관계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 예컨대 실업자나 협동조합원 또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 등은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착취 받는 노동자들에 비하면 훨씬 힘이 약하다.

물론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 같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영국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1980년대에 겪었던 패배의 기억에 짓눌려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이 "노동계급은 끝났다"는 등의 얘기를 할 때면 솔직히 웃음이 나온다.

한국 노동계급이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것이 고작 25년도 안 됐다. 나는 영국 노동계급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군사 독재를 무너뜨려 본 적은 없다. 이렇듯 **노동계급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사기저하 된다고 해서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한 마지막 쟁점은 "그렇다면 조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나는 런던에 있는 대학에서 일하는데, 런던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의 고전적 사례다. 임금 수준이 극히 낮고, 정식으로 고용되지도 않으며, 많은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은 종종 가장 약탈한 방식으로 착취를 당한다.

그런데 최근에 한 노조가 대학 청소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일부 대학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이는 무엇보다 미화원들 자신의 용기와 자기 조직화 덕분이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공 요인은 교수 · 강사와 교직원들이 포함된 대학 노조의 지원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이와 같은 연대와 단결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집트는 실업률이 끔찍하리만치 높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 부문에 속해 있다. 비교적 부유한 지역인 카이로 중심가를 가 봐도 길가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비공식 부문의 일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누군가가 일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 하나만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이 대부분이다.



사진 홍명교

"이집트 혁명은 조직 노동자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이해관계 대립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다."

자본주의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위기에 빠진 가운데 혁명이 부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파업 운동을 이끌어 왔던 조직 노동자들과 엄청난 수의 조직되지 않은 도시 빈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목격했다. 남한이나 영국보다 비공식 부문이 비할 데 없이 큰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 노동자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이해관계 대립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다.

노동자 계급

이집트 혁명은 오늘날 마르크스주의가 갖는 마지막 의미와도 연결된다. 달리 말해,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에 관한 이론과 실천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규정했다. 즉,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그들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 그저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집트 혁명만 해도 마치 기적처럼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결정적 계기가 된 1월 24일의 첫 시위는 자유주의자, 좌파 민족주의자, 혁명적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정치적 배경의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제안해서 열렸다.

달리 말해, 이집트 혁명을 처음 촉발시킨 것은 활동가들의 의식적 개입이었다. 물론 혁명에 진정한 힘을 불어넣었던 대중의 폭발적 호응은 단지 활동가들이 허공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람시의 설명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람시는 혁명이라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과 이를 조직화하려는 중심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과정이 아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

이집트에서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 혁명의 도화선 구실을 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조직화가 필요한 것이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다. 보통은 훨씬 덜 조직된 집단들이 혁명의 불씨가 된다. 정치 조직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체계적으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집단적 주체가 되는 것을 온갖 경제적 · 문화적 · 이데올로기적 방식으로 방해한다. 노동자들이 승리하려면 노동자 투쟁도 중앙집중화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형태로 중앙집중화 돼 있는 자본가 권력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

죄르지 루카치는 "조직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킨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을 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첫째,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맹목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이론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론 없는 실천도 맹목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이것저것 시도하기만 하면서 각각의 시도에서 얻은 교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결코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조직은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엮어 준다. 정치 조직은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천에서 얼마나 올바른 것으로 입증되느냐에 따라 이론을 수정하기도 한다.

혁명적 정치 조직에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혁명 조직은 그저 지도자 한 명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집단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사실 혁명적 조직에서는 최상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또 그 이론을 실천에 적용해 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에 가입하면 자신의 개성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비춰 보자면, 내가 살면서 만난 가장 괴짜스러운 사람들 중 상당수는 혁명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즉, 적어도 내가 경험한 바로는 혁명 조직이 사람의 개성을 억누른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힘을 확장시켜 준다. 자본주의에 혼자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집에서 TV와 인터넷으로만 세상 소식을 접하다 보면 완전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어느 파시스트 광신도가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등의 암울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상은 이토록 끔찍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혁명 조직에 가입해서 파시즘을 박살내려는 운동을 건설하고 노르웨이 학살범 같은 쓰레기들을 박멸하는 데 동참하는 방법도 있다. 나라면 이 방법을 택하겠다.

결론 짓자면, 우리는 엄청난 과업을 제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위기에 빠진 가운데 혁명이 부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단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겠는가.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녹취·번역 천경록

정리 발언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무역에 대해 좋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1840년대에 마르크스가 자유무역을 찬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가 마르크스의 말을 종교적 교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 준다.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은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약소국 경제를 개방시켜 그 나라 노동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하려는 수단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무역이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 개방이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그 전 시기보다 훨씬 낮아졌다.

위키리크스가 튀니지 혁명을 촉발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튀니지 혁명이 시작된 것은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청년이 자신의 노점 판매대를 경찰이 압수한 것에 항의해서 분신했을 때였다.

이 사건이 촉발한 분노 때문에 시위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확산됐고 급기야 튀니지 수도인 튀니스로 번졌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벤 알리 정권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었다.

그래서 튀니지의 사례는 부아지지 같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과 조직 노동자들의 상호의존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는 미 제국주의가 위키리크스 창립자를 매장시키려 하는 데 대해 일정한 한계 내에서(그가 성범죄 의혹에도 연루돼 있으므로) 그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그 자체로서 기존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환상(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신화인)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투쟁과 조직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위키리크스

영국에서는 6월 말에 공공부문 노동자 80만 명이 참가한 거대한 파업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영국 노조 지도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 일정을 잡으라고 압력을 넣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6월 말 파업에 동참했던 노조들은 주로 SWP가 비교적 강력한 기반을 갖춘 곳들이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비교적 작은 세력이다.

우리가 시도해 온 것은 노조 지도자들이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압력을, 좀 더 좌파적인 노조 지도자들과의 공동전선과 결합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혁명가들은 소수기 때문에 대중 행동을 조직하려면 흔히 대다수 관료적인 노조 지도자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필요한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려면 독립적인 혁명가 조직과 현장조합원 조직이 필요하다.

혁명 조직이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상명하달식 관료제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중앙집중적인 동시에 민주적인 혁명 조직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몇 년 전에 SWP도 지도부가 나머지 당원들과 거리가 멀어진 탓에 한 차례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당 내 문제를 바로잡는 데는 상당한 투쟁이 필요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중앙집중제와 민주주의 중 한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략과 전술

마지막으로 전략과 전술에 대해 말하자면, 전술은 투쟁의 특정 국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 방법이다. 전략은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향한 투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상호 연결된 모든 전술들의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전술이 적절한지를 책에서 배울 수는 없다는 최일붕 동지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지난 10여 년 사이 SWP는 여러 차례 복잡한 전술적 전환을 해야 했다. 21세기 초에는 새로 탄생한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선회했고,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반전 운동을 주도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반전 운동을 기반으로 등장한 급진 좌파 선거 연합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반전 운동과 선거 연합이 모두 붕괴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 뒤로 우리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레닌이나 트로츠키 또는 토니 클리프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고인이 돼 있었고, 그들의 저작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았다. 살아 움직이는 혁명 조직은 항상 투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오직 소규모 종파들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 조직이 올바른 혁명적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려면 조직원 전체의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토니 클리프는 "혁명 정당에는 평당원이 없다. 모든 당원이 지도자다"라는 레닌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솔직히 나는 레닌의 책 어디에서도 이 인용문을 찾지 못했다. 클리프가 꾸며 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쨌든 좋은 말이긴 하다.

달리 말하면, 혁명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저마다 투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 조직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혁명가가 되기에 지금처럼 가슴 뛰는 시기가 언제 또 있겠는가! 엄청난 위기와 더불어 감동적인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말이다.

아직 다함께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번 위기에 맞선 인류의 저항을 승리로 이끄는 데 동참하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다함께만큼 당신이 있기에 좋은 자리가 없다. 혁명 조직에 가입해서 트로츠키가 말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카다피 몰락 이후

제국주의의 아랍 혁명 납치 시도를 막아야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진 현재, 서구 열강의 개입이 아랍 혁명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온 자들, 제국주의 지배를 공고히 한 자들이 바로 이 독재자들이다.

일부 사람들은 카다피를 물리치려면 서방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방은 혁명의 성공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서방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경제적 · 전략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다.

나토와 나토의 폭격기는 자유와 무관하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의 손에 있다. 연이은 아랍 혁명에서 이뤄질 민중의 연대 말이다.

반제국주의는 아랍의 정치적 운동의 일부다. 민주적 자유를 향한 투쟁은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투쟁과 동떨어진 투쟁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바는 겉과 속이 다른 체제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리비아 반군 안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세력이 있다.

카다피의 몰락으로 다른 혁명적 투쟁들이 급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급진화는 페르시아 만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비아 민중이 나토를 환영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혁명 초기에 민중은 광범한 단결을 추구하지만 일단 독재자가 몰락하면 여러 모순들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 요소는 이집트의 상황이다. 이집트의 운동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운동이며 이 투쟁의 향배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투쟁에 결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혁명은 그 과정의 도입부에 들어섰을 뿐이며 아직은 작은 걸음을 뗐을 뿐이다.

바셈 치트 레바논 사회주의자



리비아 시민들이 8월 24일(현지 시간) 트리폴리에 있는 바브 알아지지야 요새에서 거대한 시민군 깃발을 펼쳐 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리비아에 해방이 올 것인가?

주디스 오어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카다피의 42년 독재도 종말에 이르렀다. 이번에 반정부군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했다. 도시 곳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카다피 체제의 종말은 환호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리비아에서 벌어진 투쟁의 본질은 애초 그 투쟁을 고무한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서방이 그 투쟁을 이용하면서 그리된 것이었다.

이는 데이비드 카메론이 혁명에서 영국군이 한 구실을 상찬할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권력

리비아의 반란은 더는 서방의 부와 권력에 도전하는 반란이 아니게 됐다.

2월에 민중혁명은 카다피를 몰락 직전으로 내몰았지만 카다피 지지 무장 세력의 반격에 부딪혀 물러나야 했다.

혹독한 억압 탓에 많은 리비아 사람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금지구역 설정이 생명을 구하는 중립적인 방법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엔은 전면적 군사 개입을 의결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친서방 독재자들이 몰락한 후 서방 정부들이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본 것이다.

제국주의 세력은 리비아의 반란을 가로채 자신들의 이해관계(무역 협정과 국제 석유 거래)를 유지하려 한다. 이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자신들한테 조건을 강요할 권리가 있는 양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카다피 정권에 맞서 단결한 반정부 세력들은 리비아 재건에서 서방의 구실을 두고 분열할 듯하다.

나토는 3월 19일부터 8천5백 회 넘게 폭격에 나섰고, 그 특수부대가 지상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무인공격기가 폭격과 정보 수집에 나섰다.

서방 정부들은 자국 노동자에게 '긴축 드라이브'를 강요하는 한편, 리비아 폭격에 쓰일 자금은 별 탈 없이 조달했다.

강대국들은 이 전쟁에 성공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표지를 붙이려고 안달이 났다.

그러나 서방의 동기는 '인도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레인,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운동을 그리도 홀대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그곳 독재자들이 친서방 세력이기 때문이다. 서방의 지도자들은 거리낌 없이 독재자들과 협력을 맺었다. 리비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그들과 카다피의 협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서방은 한때 카다피를 '미친 개'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것은 토니 블레어가 2004년과 2007년에 카디피와 협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혐오스런 카다피의 자리에 누가 들어서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서방은 자신과 협력할 수 있는 정부만을 옹호하려 할 것이다.

카다피가 몰락하고 그 자리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다면 서방의 지배자들은 이 지역에서 다시 발판을 얻는 셈이 된다. 더욱이 다른 곳에 개입할 자신감마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카다피의 몰락은 서방의 지배들한테 모순적인 효과가 있다.

수십 년 지배 끝에 무너진 야만적 독재자의 말로를 지켜본 다른 곳에서도 대담한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에 맞선 투쟁이 그러할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확산된 반란의 정신이 고무된다면 현재 카다피의 종말을 반기는 서방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 번 반제국주의 운동에 위협받는 처지가 될 것이다.



트리폴리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벵가지 저항 세력들
서방은 벵가지의 과도국가위원회를 승인했지만, 모든 반정부 세력이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리비아의 '합법' 정부

서방은 과도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모든 반정부 세력의 지지를 얻지는 못한다.

최근 미스라타의 반정부 세력들이 과도국가위원회 인정을 거부했으며 트리폴리로 진격한 반정부군의 일부 역시 마찬가지다.

봉기 초기에는 지방의 혁명적 장교들이 위원회를 주도했다.

카다피 정부에서 부역하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벵가지로 몰려들면서 이들과 장교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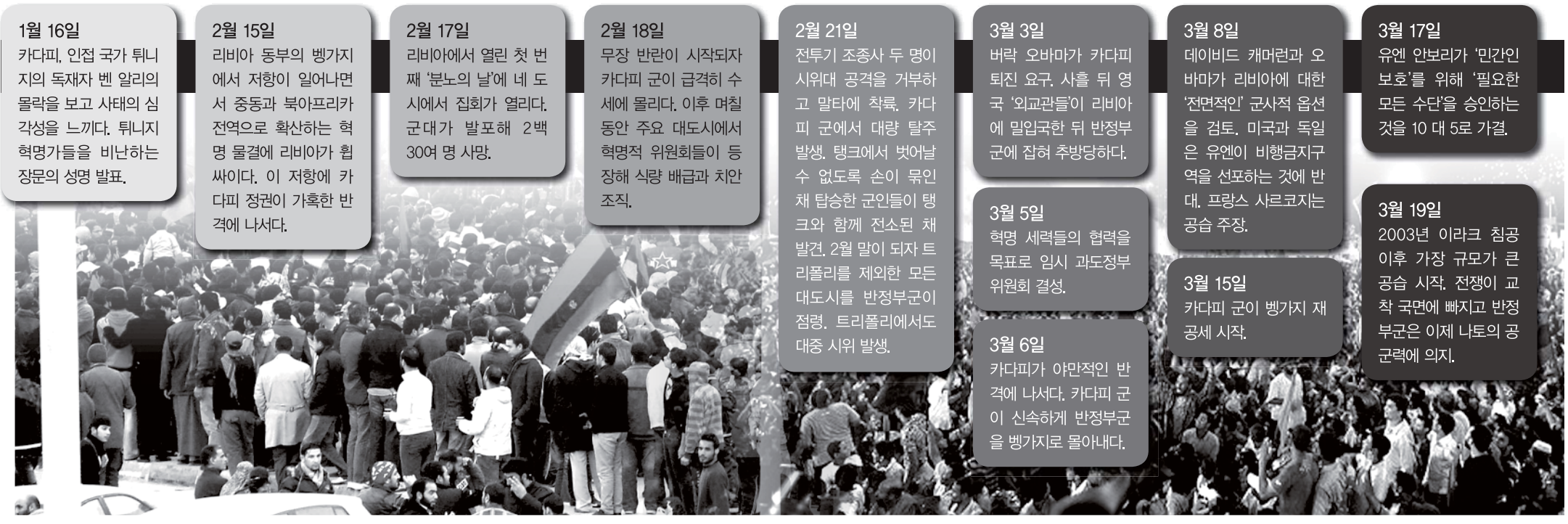
서방은 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싶었기 때문에 이탈자들을 부추겼다. 나토가 폭격을 시작하면서 과도위원회는 이탈자들의 차지가 됐다. 이들이 서방과 '협력'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과도위원회 지도자 무스타파 압델 잘릴은 2007~2011년 카다피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자다.

지난달 그는 과도위원회 무장 세력들의 지휘자가 다른 반정부군에 살해당하자 집행 위원회 전체를 교체했다.

다른 지도자 칼리파 헤프타는 리비아군이 1980년 차드를 침공했을 당시 대령을 지냈던 자다.

그는 20년 넘게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살다 올해 초에 돌연 리비아에 나타났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형석



1월 16일
카다피, 인접 국가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의 몰락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다. 튀니지 혁명가들을 비난하는 장문의 성명 발표.

2월 15일
리비아 동부의 벵가지에서 저항이 일어나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하는 혁명 물결에 리비아가 휩싸이다. 이 저항에 카다피 정권이 가혹한 반격에 나서다.

2월 17일
리비아에서 열린 첫 번째 '분노의 날'에 네 도시에서 집회가 열리다. 군대가 발포해 2백 30여 명 사망.

2월 18일
무장 반란이 시작되자 카다피 군이 급격히 수세에 몰리다. 이후 며칠 동안 주요 대도시에서 혁명적 위원회들이 등장해 식량 배급과 치안 조직.

2월 21일
전투기 조종사 두 명이 시위대 공격을 거부하고 말타에 착륙. 카다피 군에서 대량 탈주 발생. 탱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손이 묶인 채 탑승한 군인들이 탱크와 함께 전소된 채 발견. 2월 말이 되자 트리폴리를 제외한 모든 대도시를 반정부군이 점령. 트리폴리에서도 대중 시위 발생.

3월 3일
버락 오바마가 카다피 퇴진 요구. 사흘 뒤 영국 '외교관들'이 리비아에 밀입국한 뒤 반정부군에 잡혀 추방당하다.

3월 5일
혁명 세력들의 협력을 목표로 임시 과도정부 위원회 결성.

3월 6일
카다피가 야만적인 반격에 나서다. 카다피 군이 신속하게 반정부군을 벵가지로 몰아내다.

3월 8일
데이비드 캐머런과 오바마가 리비아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옵션을 검토. 미국과 독일은 유엔이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것에 반대. 프랑스 사르코지는 공습 주장.

3월 15일
카다피 군이 벵가지 재공세 시작.

3월 17일
유엔 안보리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승인하는 것을 10 대 5로 가결.

3월 19일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공습 시작. 전쟁이 교착 국면에 빠지고 반정부군은 이제 나토의 공군력에 의지.

시리아

성장하는 반란

시리아 병사들이 대거 탈영하면서 민중 반란으로 취약해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병사 수백 명이 아사드가 명령한 만행에 충격을 받아 탈영했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터키로 피신했다.

병사들 중 한 명은 홈스의 라스탄에서 '주민 청소'가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그곳 주민들이 무장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리아 전역을 휩쓴 시위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더 전투적이 되고 있다. 최근 홈스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처형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집트

계속되는 노동자 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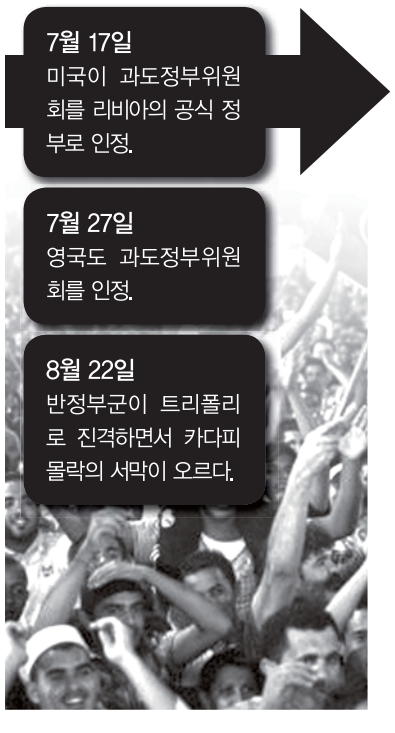
이집트 노동자들은 라마단 기간 내내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려 한다. 엘나스르 의류 · 방직 노동자들은 8월 1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 경영진은 별도의 수당 인상과 함께 15퍼센트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바란다. 그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다. 한편, 이집트 우체국 노동자들은 텔레콤 이집트의 동료 노동자들처럼 보너스 2백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작업장을 박차고 나섰다.

그들은 또한 부패 혐의로 의심받는 모든 컨설턴트를 포함해 작업장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의 부패한 인사들이 추방되기를 요구한다.

이집트 혁명의 성공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줬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9·11 10주년

미국의 몰락을 촉진한 '테러와의 전쟁'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9·11을 빌미로 미국은 자신의 압도적 군사력을 사용하고 중동을 통제함으로써 세계 패권을 재천명하려 했지만 철저히 실패했다.

2001년 9월 뉴욕과 워싱턴에서 벌어진 공격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맑은 9월 하늘에서 죽음의 비가 쏟아진 것처럼 말이다.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들은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이 맞았는가?

미국을 상대로 한 지하드 공격 계획은 9 · 11 발생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에 맞서 싸운 게릴라 전사들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 맞선 실패한 지하드 전쟁 참가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을 모집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지휘 아래, 알카에다는 이 전사들이 노리는 아랍 정권들을 후원하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미국 정보 컨설턴트 회사인 스트랫포는 9 · 11 발생 직후 만약 미국 정부가 보복으로 "여러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알카에다가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목표는 미국이 자기 능력 밖의 군사 작전을 벌이게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미국을 전략적 · 군사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미국이 이슬람 전체를 증오한다는 것을 이슬람 세계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알카에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즉 이슬람 세계에서 미국에게 군사적 패배를 안기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알카에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성취한 것 같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그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했다.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주변화됐고, 빈 라덴은 미국 네이비실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나 미국은 알카에다가 만든 덫에 걸렸다.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또한 장기적 원인이 있다.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됐다.

그러나 세계적 자본축적 과정 속에서 경제 권력은 갈수록 미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분배됐다. 1990년대 말에 네오콘 지식인 폴 월포위츠는 20세기 말과 19세기 말을 비교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경제 성장으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면서 국제 체제가 불안정해졌음을 발견했다.

압도적 군사력

냉전 종식 후 미국이 가진 주된 장점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였다. 개별 나라든 나라들의 연합이든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올 수 없었다. 1990년대 동안 아버지 부시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는 갈수록 군사력에 의존해 곳곳 — 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 의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

1991년 이라크 침략은 유엔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안보리에서 갈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지자 미국 정부는 대개 충성스런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일방주의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게 됐다.

1999년에 이르자, 뼛속까지 주류인 미국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조차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은 툭하면 다른 나라를 '불량 국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많은 나라는 미국이 불량 슈퍼파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1년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된 뒤부터 그런 경향은 훨씬 더 심해졌다. 부시 정부 안에는 부통령 딕 체니와 국방장관 도날드 럼스펠드 같은 우익 민족주의자들과 월포위츠 같은 네오콘 인사들이 포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이었다. 1997년 공화당 우파가 설립한 이 단체는 미국의 군사력을 확대해 미국의 세계 패권을 재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에게 9 · 11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와 같았다. 부시가 발표한 '테러와의 전쟁'은 단순히 알카에다의 공격에 대한 군사적 반작용이 아니었다.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적 패권을 지키려는 야심찬 도박이었다. 이것의 진정한 목표는 처음 공격한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9 · 11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이라크였다.

미국은 이라크를 장악해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 즉, 미국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가 '세계적 석유 꼭지'라고 부른 곳을 통제해 유럽과 아시아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중동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전략적 목표 외에 네오콘 전략가들은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좀더 유토피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서방 군사력을 사용해 아랍 세계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부시의 충성스런 동맹인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이 목표를 열정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 도박은 철저히 실패했다. 2003년 3~4월에 미국과 영국 침략군은 이라크를 쉽게 정복했지만, 곧 게릴라를 상대로 끝없는 전투를 치러야 했다.

소규모 첨단 군대를 이용해 '전환적 전투'를 벌인다는 럼스펠드의 이론은 군사력만으로는 분노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오랜 진실 앞에서 무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크 저항세력을 물리치려고 점령군들은 이라크 인구의 다수이자 사담 후세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시아파 무슬림과 소수파인 수니파 무슬림을 이간질했다. 이것은 끔찍한 내전과 인종청소를 가져왔고 이라크뿐 아니라 점령 자체도 산산조각낼 것처럼 보였다.

2007~2008년 동안 미국 정부가 전술적 변화를 택하면서 이라크는 약간 안정됐다. 이라크의 부분적 안정은 미국의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수니파 저항세력 중 상당수를 포섭하고 정치권력을 친이란계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당에 넘긴 정치적 타협 덕분이었다. 미국에게 이것은 엄청난 지정학적 후퇴였다.

2009년 1월에 부시의 후임으로 이라크 철군을 약속한 버락 오바마가 집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오히려 격화시켰다. 미국과 나토 동맹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의 전 동맹인 탈레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점령군들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탈레반을 몰아낼 수 없었다.

미국의 쇠퇴

결국 미국의 세계 패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쇠퇴를 촉진했을 뿐이다. 또, 2008년 발생한 세계 경제 · 금융 위기는 부시 정부가 "국가의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모델"이라 부른 영미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붕괴로 받아들여졌다.

더 중요한 것은, 2008~2009년 대불황 이후 정체한 미국 경제는 급속히 회복한 중국 경제와 대조가 됐다. 중국은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약간 앞서게 됐다. 경제 위기는 중국에 유리하게 세계 지정학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런 전환을 보여 주는 작은 사례로, 올 8월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빈 라덴 사살 작전 도중에 추락한 미국의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잔해를 조사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동맹인 파키스탄조차 중국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중동에는 민주주의가 찾아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알카에다 덕분이 아니라 이집트와 튀니지의 서방 동맹들을 무너뜨린 혁명 덕분이었다.** 나토의 리비아 개입은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급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시도다.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음을 뜻하지 않는다. 프레데터 무인 폭격기와 미국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예멘 같은 운이 없는 나라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국내의 반테러법은 없애기에는 너무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미국의 세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번역: 김용욱

칠레

두려움을 잊은 세대의 반격

청년들이 칠레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거리를 거대한 저항 운동을 축하하는 극장이자 서커스이자 연단으로 바꿨다.

지난주 칠레 노총(CUT)은 노동자 60만 명이 참가한 48시간 총파업을 벌여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이 투쟁의 원동력이자 영감의 근원은 석 달 전 시작된 칠레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투쟁이다.

칠레 공교육은 질이 매우 낮다. 노동계급 가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 칠레에서 대학에 다니려면 매달 2백20파운드~5백30파운드가 소요된다. 칠레 최저임금이 2백70파운드고 평균 임금이 7백 파운드에 그치는데 말이다.

그 결과로 학생 70퍼센트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학생들 중 절반은 부채 부담이 너무 커 학업을 마치지 못한다.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은가!

그러나 모든 칠레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말하듯이 이 운동은 단지 학생들의 빚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다. 이 운동은 계급에 관한 운동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아래 칠레는 세계 신자유주의의 실험실이었다. 현 칠레 교육제도는 1973년 군사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독재 체제는 20년 전에 종식됐지만 그것이 만든 교육 제도는 그렇지 않았다.

현 칠레 운동의 놀라운 점은 청년 지도자들의 전투성, 창조성, 그리고 정치적 명확성이다. 산티아고 학생연합 의장 카르멘 세풀페다는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법은 가르쳐도 역사, 과학과 철학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



8월 25일 대통령궁으로 행진하는 칠레 시위대

교육 상품화에 반대하는 시위의 구호와 요구 들은 학생과 교사를 단결시키고 있다.

칠레 학생들은 다국적 기업이 건설하는 이드로아이센 댐에 반대하는 운동을 포함해 다른 부문 운동의 요구도 수용했다. 그들은 차별과 조상이 물려준 토지 강탈에 맞서 싸우는 마푸체 원주민 운동을 환영했다. 그들은 2008년 지진으로 자기 집이 파괴된 후 아직도 갈 곳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시위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마가야네스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 행진했다.

학생들은 이 모든 운동을 결합시키려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칠레 경제는 호황을 누리지만, 국민의 15퍼센트는 끔찍한 빈곤에 고통받는다. 학생들은 "구리를 판 돈으로 빈민을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구리는 칠레 제일의 수출품으로, 현재 민간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두 달 동안 갱도에 갇힌 광부 서른 세 명이 보여 줬듯이 이 기업들은 광산 노동자를 희생시켜 엄청난 이윤을 벌었다.

칠레 학생운동은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의 적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단지 세바스티안 피녜라가 주도하는 현 우익 연립 정부만이 아니다. 사회당의 미셸 바슐레트가 이끌었던 중도좌파 콘세르타시온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이 운동은 '겁을 상실'했다. 군부 독재 아래 한 세대 동안 칠레 좌파는 망명하거나 침묵했다. 새로운 세대는 두려움을 잃었고 저항의 힘을 재발견했다.

최근 벌어진 '헌법을 위한 스릴러' 시위는 거의 전율을 자아냈다. 수많은 사람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곡에 맞춰 좀비 춤을 췄다. 그들은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처럼 선출된 제헌의회가 새로운 민주 헌법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사람들은 옛 군사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를 바란다. 어떤 현수막에는 자신들이 '정당이 없이 단결한 민중'을 바란다고 적혀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 벌어진 광장 점거 운동과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정치에 대한 반감에는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칠레의 역사는 정치의 부재가 얼마나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잘 보여 줬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타협들 사이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2천 명을 연행하고 열네 살 마누엘 구티에레스가 죽은 것은 지배계급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줬다. 대안은 운동과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은 단결이다.

한 산티아고 고등학교에 그려진 낙서 — '반란은 전염병처럼 퍼진다' — 처럼 말이다.

마이크 곤살레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중국

농민공의 고달픈 처지와 막강한 잠재력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 기적' 덕분에 중국은 세계적인 공산품 수출국이 됐다. 그러나 그 뒤에는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온 이주노동자) 수억 명의 고통이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도 중국의 성장은 주로 서방, 특히 미국에 소비재를 수출한 덕분이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다수 컴퓨터, 핸드폰, 복사기, 신발과 의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중국의 이런 엄청난 성장은 농민공들이 끊임없이 도시로 유입된 덕분에 가능했다.

그들은 끔찍한 노동조건 아래 매주 6~7일 동안 매일 14시간씩 일한다. 사장들은 툭하면 일하는 시간 동안 작업장의 화재 비상통로로 향하는 문을 잠근다. 관리자들은 툭하면 노동자들을 구타한다.

2003년 정부 조사를 보면, 농민공 가운에 75퍼센트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계속 도시로 몰려들었다. 농촌보다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일자리를 수시로 옮겼다. 그들은 또한 노동중재법정이 보장하는 새로운 권리를 이용해 밀린 임금을 받아내려 애썼다.

그들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1994~1995년 동안 농민공의 거의 30퍼센트가 일하는 광동성에서 파업이 7백 건이나 벌어졌다.**

이런 파업들은 종종 이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확산됐다.

이런 투쟁들 중 상당수는 요구 조건 중 일부를 따내면서 성공했다. 그럼에도, 이런 투쟁들은 주로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이 없는 고용주의 만행에 항의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농민공들은 보통 설날을 전후해 2주 동안 고향을 방문하며 이때 대다수 공장들은 잠시 문을 닫는다.

2006년 초, 광동성 정부는 고향에 간 노동자들 중 2백만 명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농민공들이 임금이 높은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인구 집단의 변동 때문이기도 했다.

1980년대 초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것은 청년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중국에서 농민공이 한창 일할 나이인 19~22세 사이 청년의 수는 약 1억 명이다. 2020년에 이르면, 이 수는 5천만 명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2천만 개에서 2천5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2009년에 사용자들은 일손 부족을 다시 호소하기 시작했고, 각 성 정부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했다.

2010년 여름 일부 농민공들은 자신이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됐음을 보여 줬다. 자동차 공장들에서 공격적이고 잘 조직된 파업이 벌어졌고 다른 공장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됐다.

그들은 파업 피켓팅을 벌였고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고 기층에 기반을 둔 파업 위원회를 결성했다. 비록 일부 파업 지도자는 해고됐지만 이 투쟁들은 대부분 대폭적 임금인상을 따냈다.

그러나 아이폰과 다른 애플 제품을 만드는 폭스콘의 대형 공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자살 사건은 농민공 삶의 다른 측면을 보여 줬다.

불과 1년 사이 청년 노동자 10여 명이 강제 초과 노동, 노동권 유린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농민공들은 광동성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만 거주권이 없다. 그들은 주로 회사가 제공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상황은 엄청난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농민공들은 자신의 힘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 부모들은 참았던 노동조건을 더는 참으려 하지 않는다.

개별 고용주와 지역 정부는 이 분노를 잠재우려고 임금을 올렸다. 그러나 한 서방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임금인상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와 관료 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겁을 먹었다."

중국에서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투쟁이 폭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은 이미 존재한다.

찰리 호어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개강과 함께 다시 불붙은 '반값 등록금' 투쟁

2학기 개강과 함께 '반값 등록금' 운동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과 최근 출범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이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9월 29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상급식 승리에 이어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이 성공적이려면 상반기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반기 등록금 투쟁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 줬다.

서울에서만 열 곳이 넘는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됐고, 5월에 벌어진 반값 등록금 거리 시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6월 10일 이후에 한대련이 주도한 이 운동은 더 커지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운동의 요구와 참가 세력을 확대하며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할 때 국회에 압력 넣기 수준으로 운동을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

운동이 가라앉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을 낮추려면 가짜 대학들을 없애야 한다'며 대학 구조조정만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곧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발표해 학자금 대출과 대학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손학규와 이명박의 영수회담 때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도 '대학 구조조정'이었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다.

진보진영 내에도 '대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혼란이 있다.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를 줄일 게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구조조정

따라서 하반기에 반값 등록금을 위한 투쟁은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실제로 29일 집회에는 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부산대 학생 들과 교육대학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참가할 것이다.

서울대와 부산대 학생들은 법인화 반대 동맹휴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도 30일에 동맹휴업을 할 계획이다. 이것은 점거 농성으로 발전할 필요도 있다.

한편,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이명박은 그래도 반값 등록금 공약이라도 했지만,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은 더 많이 올랐고 우리는 반값 등록금 공약조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운동에 나서지 않아서였다" 하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뻔뻔스러운 말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등에 기대서는 진정으로 등록금 인하를 이룰 수 없다는 진실을 드러냈다.

정선영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9월 19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싣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싣습니다.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짓밟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8월 30일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옹호한 것은 2004년 합헌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군대를 거부하고 양심을 지키려 한다는 이유로 매년 젊은이 8~9백 명을 감옥에 가두는 반인권적 행태를 헌재가 또다시 정당화해 준 것이다.

헌재 결정 요약문은 온통 안보에 대한 우려, 병력자원 손실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투성이다.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보루인 군대를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양심의 자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2004년 헌재가 같은 결정을 내릴 때는 그나마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부분조차 도무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후퇴는 정부의 심각한 정치 위기와도 관련 있는 듯하다. 안보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단속하고, 권력 누수 현상을 막아 보려는 것이다.

야만

이번 판결은 수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유엔 등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부터 세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입법을 권고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백 명에 대해 "이들에게 유죄 선고를 한 것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2009년에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야 했다. 이때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는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거부하는 양심과 현실의 탄압 사이에서 말 못할 고뇌에 빠져 있다. 헌재의 결정은 이런 청년들에게 벼랑 끝에서 떨어지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한국전쟁 이래 1만 5천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왔으며, 현재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90퍼센트가 한국에 있다. 언제까지 이 야만은 계속돼야 하는가. 하루 속히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징병제가 폐지돼야 한다. 이미 부유한 자들의 자식은 다 면제받고 있지 않는가. 이는 명백한 계급차별이기도 하다.

김영익 양심적 병역거부자

"끈질긴 투쟁으로 마침내 정규직이 됐습니다"

나는 3년 8개월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의 일종인 별정직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규직이 되면 1년짜리 계약을 반복하지 않고 각종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거라던 나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했다. 나를 외면한 정규직 노조와의 끈도 계속 유지하고, 투쟁하는 다른 작업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탈당하면 해결된다는 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내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버텼다.

결국 지방 · 중앙노동위원회는 내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단은 터무니없게도 1년짜리 계약직을 제시했고, 내가 거부하자 바로 해고를 했다. 나의 싸움은 연장됐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에는 공단과 면담해 복직했다. 3년 만에 일터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별정직 전환은 계속 미뤘다. 그러다가 지난 7월 1일 나는 드디어 별정직원이 됐다! 이제 내 임금은 다른 정규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지출되고, 성과급, 교육 기회 등 각종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됐다.


8월 2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성향아 씨 전명이 찍음

정규직 발령 후 정규직 노조 가입이 승인됐고,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의 조합원이 됐다. 나는 지난 2007년 해고 후 나를 조합원으로 받아 주고 복직투쟁을 지도해 준 공공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또한, 나는 변함없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나의 정규직 전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 간부들은 노조 소식란에 내 승리 소식을 올려 줬다. 힘들게 싸우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힘이 나는 소식"이라며 나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두 번 해고를 당하는 동안 변함없이 지지해 준 공단의 정규직 동료는 내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보였는데, 사실 내 마음에도 행복한 눈물이 마냥 솟아올랐다.**

지난 시기에 내가 가장 깊고 분명하게 느낀 것은 내 자신이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길을 각성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노동자 연대 활동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해, 깨달은 바와 일상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

성향아

한미FTA에 반대한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에게 연대를!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ICAAP, 아이캅)에서 벌어진 경찰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한다.

아이캅은 에이즈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이며, 2천여 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감염인, 성소수자, 성노동자 등이 모이는 연대의 장이다.

애초에 한국 정부는 이 대회의 당사자인 HIV/AIDS(에이즈) 감염인, 성소수자, 성노동자 등이 입국하는 것을 꺼렸다. 어떤 활동가는 아예 입국이 금지됐고,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입국 심사 때 성기 모양을 확인하겠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도 들어야 했다. 정부가 이 대회를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 대회의 슬로건처럼, '감염율 제로, 사망률 제로, 차별 제로'를 위해 한국 활동가들은 이 대회를 성실히 준비해 왔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행동이 절실했다. FTA가 발효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제의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지금도 전 세계 환자의 60퍼센트가 특허권 때문에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처럼 FTA와 특허권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한 생명포기각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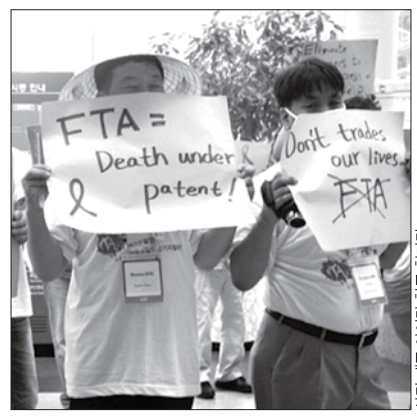


사진 제공 아이캅 한국 참가단

8월 27일 아이캅 대회장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시위 "우리의 생명을 거래하지 말라"

이 문제는 아태지역 활동가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미FTA는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이뤄질 신자유주의적 협정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EU FTA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인도 활동가들의 목소리도 중요했다. 전 세계 복제약 생산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인도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외 활동가 2백여 명은 27일 낮 아이캅 대회장 앞에서 한미FT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우리의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몰래 들어와 시민을 가장하고 사진 채증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대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분이 노출되면 혐오와 차별에 직면하는 감염인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한 것도 모자라 채증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연행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병원에 찾아와 형사처벌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 국내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조직위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고 경찰과 정부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국제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에이즈라는 병을 가지고 있거나,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모욕감을 안길 권리가 없다. 정부는 입국을 거부당한 해외 활동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혐오와 낙인 속에 있는 HIV/AIDS감염인들에게 연대해 달라. 우리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 달라.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한미FTA를 함께 거부하자.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직업군인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방부

검찰총장 한상대가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던 한 향린교회 신자가 기무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무사는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조사한 근거로 향린교회에 가입하면서 쓴 자기소개서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서명 참가, 성공회대 노동대학에서 공부한 것 등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전쟁과 마주쳐야 하는 군인으로서 미 · 소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평화적 통일을 염원했을 뿐이다. 또한, 군인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진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도 죄가 아니다.

한국군의 부패와 지나친 반공의식, 친미주의에 문제의식을 느낀 군인들이 기존의 재향군인회를 탈퇴하고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그에 대한 기무사의 조사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불행하게도 이미 두 차례의 조사를 받은 그 신자는 이로 인해 강제 전역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조사 후 생긴 뇌동맥 이상으로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의연하게 자신에 대한 기무사의 조사는 "국가보안법을 통한 여론 형성"일 뿐이라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이번 향린교회 신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사는 향린교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조사"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신자들 역시 국방부에 항의해 하루 두 차례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일요일에는 교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기도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는 결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나 역시 국방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탄압은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외적으로는 프랑스마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세계경제 위기, 국내적으로 무상급식 관제투표 부결에 따른 오세훈 시장 사퇴와 '희망의 버스'로 인해 정권의 정당성이 계속 위협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후의 몸부림인 것이다.

김재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토론회
미국 경제 위기 – 미국 헤게모니는 몰락하는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9월 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 제공)
문의: 070-8113-8541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토론회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
연사: 한규한 (다함께 활동가)
일시: 9월 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S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2-416-0963, 010-4545-4797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흔들리는 세계 경제 – 금융 위기는 다시 올 것인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9월 6일 (화) 오후 7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134 (9번 게이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01번지 13호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에 부쳐

전투성과 연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현장실천연대·전국회의·전국현장노동자회 등 세 개 현장 조직이 통합 후보를 구성해 단독 출마했다.

9월 26~28일 투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선거는 아직까지 큰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금속노조 지도부가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산별노조 무용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투쟁 작업장 노동자들과 좌파 활동가들 사이에선 후보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상철 위원장 후보가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이 속한 현장 조직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상철 후보는 지난 현대차지부 임원 선거에서 무원칙하게 이경훈 지부장과 같은 우파와 손을 잡았다. 이경훈 집행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인 25일간의 점거파업에 찬물을 끼얹은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세 현장 조직은 금속노조의 혁신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원칙하게 선거연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가 위기에 처한 이유를 규명하고,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일 텐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무너진 금속노조, 변혁과 연대의 회복을 위한 토론회'는 의미있는 평가의 자리였다.

이 토론회 주 발제를 맡았던 **김소연 금속비투본 본부장(기륭전자분회 분회장)**의 글을 싣는다.



8월 27일 밤 서울 도심을 누빈 4차 '희망의 버스' 금속노조는 이런 투쟁에 앞장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끌어 올리고, 부문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사진 이윤선

15만 금속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금속노조가 지난 몇 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변혁성과 연대는 사라지고 노사영합(협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첫째, 변혁적 노동운동이 실종됐습니다.

[지도부는] 2007년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 이후 단 한 번도 전국적 정치파업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5월 촛불항쟁이 타오를 때 금속노조 ·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호소가 이어졌지만, 촛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한 7월이 돼서야 단 한 차례의 두 시간 파업만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4월 타임오프 저지 총파업도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연기하더니, 끝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연대 투쟁의 전통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조합원들의 처절한 77일 파업에 대한 연대 파업 결정도,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 점거파업에 대한 연대 파업 결정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크레인 고공 농성과 유성기업 동지들의 투쟁을 연대 파업으로 맞서기는커녕, 선거를 이유로 임단협(임금 · 단체협약)마저도 조기 타결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희망 버스'에 대해서도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

금속노조는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로 어떤 의미있는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인 1사1조직도 현대차 · 한국지엠 등 주요 작업장에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조차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의 25일간 파업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연대 파업도 외면했습니다. 직업안정법 · 파견법 등 노동법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사영합(협조)주의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현대차지부가 무쟁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후, 정파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의 노사영합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 확보와 투쟁을 통한 고용 안정이 아니라, 무쟁의를 통한 수천만 원의 일시금과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투쟁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요구를 내걸어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낸 '희망 버스' 투쟁을 회피하고, 투쟁 사업장들의 절박한 요구로 만들어진 '공동투쟁단'을 비롯해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절차와 형식을 들이대며 연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혁성과 연대성을 잃어 버린 금속노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선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은 살아있습니다.

노조법 개악에 맞선 2010년 금속노조 특별단체교섭 찬반 투표에서 많은 우려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 점거파업에는 수많은 정규직 조합원들과 전국의 활동가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사회적 연대도 넘실대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벌인 6년간의 투쟁에 수많은 시민 · 사회단체가 함께해 1천8백95일 만에 정규직화를 쟁취했으며,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백 일 넘게 양재동 노숙 투쟁과 광범한 연대로 5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은 지역의 연대를 만들어 냈고,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희망 버스'는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 사회적 연대 투쟁의 절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경련 회장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비롯해 노동자의 피땀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벌들의 탐욕과 이를 비호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희망 버스'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 투쟁을 점화시켰습니다. 노동운동이 단호하게 싸워 나가고 시민·사회가 연대한다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이런 투쟁에 앞장서며 변혁성과 연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너진 금속노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올해 8월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해 왔다고 자축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어서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매해 쿼터를 정해 해외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도인데, 구직부터 직장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8월 20일 '이주공동행동'이 주최한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에서도 폐지 요구가 높았다. 이 토론회에 네팔, 필리핀 이주노동자 30여 명을 비롯해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참가한 네팔 출신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은 기회와 권리를, 사장에게는 초착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며 정부가 말하는 "동등 대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 제도 때문에 경제적 · 법적 불이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너무 심하"다며 최근 자살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 제도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송출 비리로 인한 고비용 입국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셸 위원장은 "이 제도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비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며 심지어 "브로커들이 고용지원센터 안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고용허가제 자체가 심각한 문제덩어리지만, 특히 직장 변경 금지, 5년 미만의 단기 체류만 허용해 정주를 금하는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셸 위원장은 "정부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금한다고 말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커다란 기여를 이미 하고 있고 세금도 내며 한국에서 소비를 한다"며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제 덩어리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허가제 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10년 귀환 대상자 중 24퍼센트가 미등록으로 남아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만 8천1백 명이 미등록 체류로 남을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로, 단기 순환은 영주 허용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필자도 토론자로 참가해 "고용허가제의 온갖 규제들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의 처지에 차별을 두어 분열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런 규제들을 폐지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이 과거에 악명높았던 '산업연수제' 폐지 투쟁을 해서 성공했던 것처럼, 고용허가제에 대한 명백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서로 단결해 정부에 맞서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이주운동진영이 고용허가제 폐지라는 공통의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 참가자의 주장처럼 "고용허가제 시행은 이 제도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이주 운동의 분열을 낳았고 이 때문에 운동이 매우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정원

미등록 이주노동자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고 있거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민. 정부가 사용하는 '불법' 체류자는 잘못된 용어다.

노동허가제
고용주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정해진 업종(또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제도이며, 체류 기간도 최초 5년을 보장하고 추후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정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소식·보고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9월 19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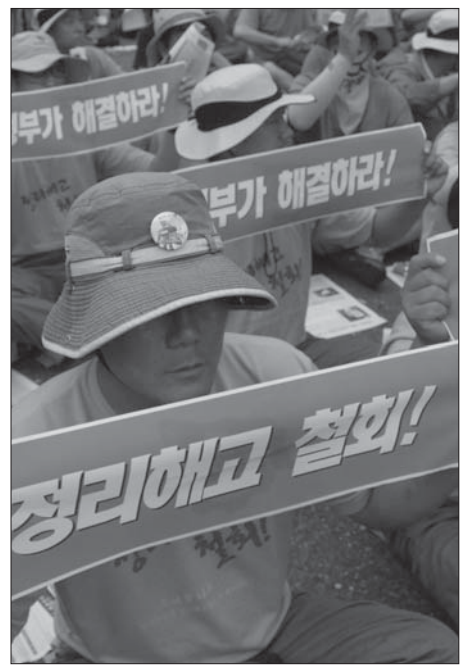
"새로운 지도부와 투쟁력을 만들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지회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채길용 집행부에 맞서 새롭게 지도력을 구성해 투쟁을 조직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함께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지회 문영복 조합원을 인터뷰했다.

그간 한진중공업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연대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농성이 계속되고, 이 때문에 만들어진 '희망 버스'가 노동자 · 민중의 단결의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투쟁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 내 논쟁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싸워 이기려는 의지, 투쟁력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투쟁을 돌아 보면, 채길용 집행부에 대한 대응이 부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간 힘들게 진행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되고, [배신적] 6.27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파업 대오가 공장 밖으로 끌려나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6.27 합의 이후 결성된] '정리해고 철회 투쟁위원회'(현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는 아직까지 채길용 집행부가 권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길용 집행부 쪽도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조합원들 대다수의 바람은 사실상 어용인 채길용 집행부에 반대해, 정파를 넘어 단일화된 후보를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칭)'가 곧 꾸려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채길용 집행부를 타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복원하고 지금까지보다 수위 높은 투쟁과 파업을 이어가고, 그래서 85호 크레인의 동지들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구호로 내세울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소은화

기아차 금속노힘

'노동자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의 좌파 집행부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집행부를 배출한 현장 조직 금속노힘(금속노동자의 힘)이 내부 논쟁에 휩싸였다. 일부 활동가들은 올바르게도 "우리의 초심, 정체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고 제기한다.

2년 전 금속노힘이 노조 지도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해 신뢰를 쌓아 왔기 때문이다. 금속노힘은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서 싸우고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으며, 미군기지 · 한미 FTA · 전쟁과 파병 등에 반대하는 정치 투쟁에서도 인상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가 된 이후, 김성락 집행부와 금속노힘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금속노힘의 일부 활동가들은 '김성락 집행부가 정부와 사측의 타임오프 공격을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일정 사실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의 본질이 노조의 전투성과 정치성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보면, 이들의 행보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김성락 집행부는 2년간 무쟁의로 투쟁을 회피했다. 현장 노동자들에서 멀어져 사측과의 협상에만 주력한 것이다. 그래서 올해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김성락 집행부는 노조 조합원 수첩을 없애는 대신 "사측의 사훈과 경영 방침"이 담긴 사원 수첩을 배포했고, 심지어 지부장이 사측 소식지에 인터뷰까지 했다. 실용주의가 고개를 든 것이다.

무엇보다 기아차지부가 금속노조와 전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김성락 집행부가 대표적인 좌파 지도부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김성락 집행부는 자기 작업장의 담벼락 안에만 갇혀 연대 투쟁에도 소홀했다. 이들은 지난해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아차 본사 앞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갈 때 실질적인 연대를 조직하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 때도, 유성기업 투쟁 때도, 세 달 가까이 이어진 '희망의 버스'에서도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연대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를 제공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현대 · 기아차 노조의 투쟁 회피를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 해제를 종용했다.

연대

김성락 집행부는 또 비정치적 조합주의에 갇혀 있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을 약화시킬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 반대 캠페인'에서도 별 구실도 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금속노힘은 김성락 집행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독립적인 실천을 하지 못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김성락 집행부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지금도 반성적 평가 없이 선거 논의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 일부에 다함께 회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정말이지 뼈아프고 애통한 일이다.

좌파 현장 조직이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현대차에선 이런 일이 반복돼 현장 조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다. 노동조합의 한계 속에서도 좌파 활동가는 노조에 개입해 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노조 지도권 장악에만 매몰돼 노조의 부문주의 · 조합주의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투쟁을 건설하며 정치적 노조 운동을 건설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금속노힘 활동의 중심에도 이런 활동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면 독자적인 행동을 건설했고, 전체 계급 세력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다.

당시 다함께 회원(김우용 동지)은 이런 활동을 주도해 동료들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그가 구속됐을 때 바로 이 동료들이 비공인 파업까지 벌이며 그의 석방을 기원했다.

그가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이런 자랑스런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며 자기 비판적으로 활동을 재평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3년에 기아차의 한 다함께 회원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도록 토론하고 조직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노동자의 정치"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금속노힘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노동자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모승훈

부산대

학생총회와 동맹휴업을 결의하다

얼마 전 부산대와 부경대 총장이 밀실에서 발표한 통합 선언이 학생들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월 2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9월 21일에 학생총회를 열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9월 29일에 동맹휴업도 하자고 호소했다. 동맹휴업은 학생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대와 부경대 통합 추진에 맞선 싸움은 법인화 · 구조조정 등 교육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정부와 학교 당국에 맞서는 투쟁이다. 학생들은 비민주적 대학 운영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학생들의 총장 선거권도 요구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도 요구에 포함됐다.

또 삼성 등이 지은 상업 시설인 '효원 굿 플러스' 안의 공간을 학생들을 위해 쓰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건물은 현재 거의 비어 있다.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해 고통받는데 대기업이 소유한 대형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총학생회는 설문조사, 릴레이 1인 시위, 아침 · 점심 · 저녁 홍보전, 천막 농성과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학생총회 조직에 높은 열의를 보였다. "서울대도 법인화를 막으려고 9월 28일에 동맹휴업을 한다. 우리도 총회를 꼭 성사하자."

학생총회와 동맹 휴업에 더해 우리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본관 점거 농성 같은 투쟁도 벌여야 한다. 점거 농성은 하루 시위를 넘어 학교 당국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통합 추진과 교육 시장화에 반대해 교수 · 직원 들과의 연대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상엽 대학생다함께 부산대 모임

전교조 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

'전액 반납'과 '균등 분배'를 분명히 하자

8월 27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도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올해 10퍼센트 차등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그 비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교조 지도부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도부는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 균등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반납하는 것도 열어둔다"는 지침을 내렸다. 즉, 차등은 유지한 채 일정액만 반납해도 되도록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6만 조합원들에게 평균 5만 원씩 걷어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는 무늬만 '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이지 사실상 투쟁을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성과급 반납 조직은 잘 되지 않았다. 8월 16일 현재까지 6억7천만 원만 걷혔을 뿐이다. 이는 2006년에 견줘 1퍼센트도 안 되는 액수다.

더구나 지도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학교별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을 빼버리기까지 했다. 별도로 반납액 사용처만 안건으로 다뤘을 뿐이다. 일정액만 걷어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므로 투쟁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좌파 대의원들은 수정안을 발의하며 성과급제 폐지 투쟁 조직을 강력히 호소했다.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도부가 내놓은] 하반기 사업 계획은 보기가 싫다. 순 야당과의 공조만 나와 있지, 조합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빠져 있다. 조합원들을 믿고 올바른 투쟁 방침을 세워야 한다."

또 다른 대의원은 과거 투쟁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전교조는 비조합원에게도 성과급을 걷으면서 '낸 만큼 당당하게 싸우고, 투쟁 이후에 분배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투쟁조차 조직하지 않은 채 기금 사용만 얘기하니 답답하다."

실제로 전교조는 2001년에 반납 투쟁을 광범하게 벌여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2006년에도 반납 투쟁을 벌여 무려 7백70억 원을 모은 바 있다.

무력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 대의원들의 투쟁 계획 발의는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도부는 정당한 제기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대회를 유회시켰다.

성과급제 폐지 투쟁은 진지하게 건설돼야 한다.

성과급제는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분열시키려고 도입됐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입시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를 심화하고 교사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한두 명 때문에 학교 등급이 떨어져 모두의 임금이 깎일 수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려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구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자체를 거부하고 단결을 꾀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개인이 취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액' 반납을 열어둔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급 폐지 집회와 캠페인을 광범하게 벌이면서 투쟁을 실질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 다함께는 이런 투쟁을 잘 제기했지만, 반납액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이후로 유보하자고 제기한 것은 부적절했다. 성과급이 교사 임금의 일부이니만큼, 그 용처를 분명히 하는 게 평범한 교사들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과 2006년에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조합원 · 비조합원에게 전액 반납을 조직해 교과부에 반납하고 동시에 수당으로 재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교과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균등 분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

균등 분배는 교사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현장에서 무력화시킬 방법이다. 이 점에서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누적해야만 투쟁의 효과가 있다며 균등 분배와 대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적 토론을 거쳐 일정 비율의 액수를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확대하려는 노동자 분열 정책에 맞서, '전액 반납'과 '균등 분배'라는 분명한 기준을 삼고 광범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레프트21 www.left21.com
제64호 | 2011년 9월 3일 ~ 9월 23일 | 값 1,800원

궁지에 몰려 '공안 탄압'에 매달리는 우파

이명박 정권과 우파가 궁지에 몰리자, 지배자들은 오래된 전공 과목인 '공안 탄압'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공안몰이의 앞잡이는 이명박의 고려대 후배이자 'BBK 소방수' 구실을 한 한상대다. 이명박은 병역면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스폰서 의혹 등 온갖 구질구질한 비리 의혹에 시달리던 한상대를 끝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한상대는 취임하자마자 이명박의 방망이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상대는 취임사에서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왕재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반국가단체 혐의자를 기소한 것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왕재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주요 결정을 앞둔 시점이자 무상급식 투표에서 우파가 패배한 바로 다음 날 벌어졌다.

그 다음 날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부정 의혹을 터뜨렸다.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는 대검 공안부장이 주재하고 경찰청, 국방부, 노동부, 기무사 등이 참여한 공안대책협의회가 쌍용차 점거 파업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이 회의 후 검찰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한진중공업 '희망의 버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서는 경찰 수뇌부까지 합의한 연행자 석방을 뒤늦게 문제 삼아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면서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다. 이미 강정마을 회장 등 3명이 구속됐고, 70여 명을 수사 중이다. 한진중공업 '희망의 버스' 기획단 11명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친북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한총련 웹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기도 했다.

이런 집중된 탄압은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선거를 겨냥해 진보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보수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FTA 등 아직 완수하지 못한 우파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걸림돌이 될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레임덕으로 정당성과 추진력이 거의 소진된 이명박에게 남은 것은 몽둥이와 군홧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반발과 역풍을 불러오기 쉽다. 따라서 이런 탄압에 주눅들지 말고 진보가 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자신감과 투지를 유지해야 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사진 〈레프트21〉

8월 24일 열린 '왕재산' 사건 기소 규탄 긴급 기자회견 마녀사냥에 맞서 정견을 뛰어넘어 단결해야 한다.

'왕재산' 사건

어처구니없는 마녀사냥에 맞서 진보가 단결해야

'왕재산' 사건은 검찰총장 한상대의 첫 기획 작품이다.

하지만 "12년 만에 적발한 반국가단체 사건"치곤 너무나 어설프다. 검찰이 밝힌 '왕재산' 조직원은 5명인데, 황당하게도 고작 5명이 "군부대와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무장봉기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팔레스타인을 보면 1명만 궐기하면 폭파할 수 있지 않나" 하며 우기고 있다.

'반국가단체'의 요건인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근거도 없다. 검찰이 인천지역당의 주요 책임자라고 거론한 두 사람은 4년 동안 전화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황당하게도 "지난 4년간 왜 전화통화를 한 번 안 했냐?"고 타박했다.

이들이 북한 당국에 넘겼다는 정보들도 '국가 기밀'과는 거리가 멀다. 미군 야전교범과 군 시설 주변 위성사진 등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내부 동향과 남한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언론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나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검찰은 이처럼 부실한 엉터리 근거로 뒷받침된 마녀사냥을 통해 반정부 진보 활동가들과 단체가 '간첩'이거나 북한의 꼭두각시라는 메시지를 주려 한다. 이번에도 검찰은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심지어 진보대통합조차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인 양 묘사했다.

북한이 "[진보]통합이 파탄될 경우 진보신당을 고사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거나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노총 등의 내부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말을 검찰이 흘리는 것은 진보진영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 연연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방어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남한 지배자들과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들, 진보대통합 등이 모두 북한에 놀아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진보 진영을 모욕하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심지어 남한의 진보 활동가들 중 일부가 북한에 친화적이거나 몰래 북한 관계자와 접촉했다 해도 그들은 대개 '간첩'이 아니라 남한 진보운동의 일부로서 남한의 민중과 함께 이 사회의 모순에 맞서 싸워 온 동지들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 이것은 진정한 진보 대안을 위해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이지, 처벌하고 탄압할 문제가 아니다. 〈레프트21〉도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고 북한 3대 세습 등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해 왔지만, 북한을 지지하는 견해 때문에 누군가가 국가 탄압을 받는 것에는 단호히 맞서서 방어할 것이다.

게다가 남북한 지배자들과 기업가들은 수시로 왕래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협상을 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데, 남한의 민중운동 활동가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면 처벌받는 것도 엄연한 이중잣대다.

북한에 우호적인 단체와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 앞에 진보가 단결해 맞서지 않는다면 '일심회' 사건 당시처럼 진보운동은 분열 · 위축될 수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왕재산' 사건 구속자들을 방어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정견을 뛰어 넘어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이 사건을 이용해 '종북주의'라며 동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대응해서 괜히 사건을 키워 줄 필요 없다'는 식의 수세적 태도보다는 탄압을 고발하고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방어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미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 진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은 기지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진압할 수순 밟기다.

강정마을의 강동균 마을회장과 평화활동가 등이 8월 24일 구속된 데 이어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문정현 신부마저 긴급 체포되기까지 했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마을 주민과 협상했다는 이유로 서귀포 경찰서장을 경질하며 초강경 대응을 부르짖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회의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공권력을 투입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각종 유언비어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관련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 주는 중요한 곳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 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이곳에 배치될 한국 이지스함은 언제든지 미국 주도의 해상 MD 체제로 전환 가능하다.

이 기지에 미국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제주 해군기지가 인도양-말라카 해협이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중국 · 한국 ·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공업국들의 석유 공급로가 이곳을 통과한다. 지난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었던 윌리엄 팰런은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들어 "한미동맹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한국이 미국 국방부라는 개가 흔드는 꼬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 정부의 군사력 확장 야욕과도 관련 있다. 한국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를 앞으로 창설될 전략기동함대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기존의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제7기동전단에는 2012년에 실천 배치될 두번째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이 추가 배치된다.

개와 꼬리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한국 정부의 군사력 확장 시도에 이용될 제주 해군기지를 막아 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아시아의 군사적 갈등 고조를 부추길 뿐이고, 더불어 한반도도 더 위험에 빠뜨릴 계획이다. 복지가 아니라 무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반대 운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제주시는 문화쇼핑벨트와 관광 요트 등 해양레저관광지구 복합단지 등을 만들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덮고 제주도민의 여론을 호도해 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적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가 결코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것도 옳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모여야 한다. 9월 3일에는 한진중공업 '희망의 버스'를 본뜬 '평화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이고, 제주 전역에서 '평화버스' 20여 대가 운행된다. 이런 저항이 더 확대돼야 한다.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시위 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니 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도 강경 진압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제기돼,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사업이었고, 참여당 유시민 대표도 2007년 대선 예비후보 당시 "해군기지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을 돌아보면, 이들이 입장을 바꾼 것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여론과 그 운동이 낳은 성과다. 우리는 민주당 · 참여당이 해군기지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일관되게 운동을 지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평화와 환경을 짓밟고 전쟁과 파괴를 가져올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내자.

김어진